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2011년 ‘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5년을 시작하며-

일 시 : 2011. 2. 17(목)오후 2시

장 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관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www.sswkorea.org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	2
2. 인사말.....	3
3. 축 사	
오 영 숙 前 세종대 총장.....	5
진 수 희 보건복지부 장관.....	6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前보건복지부 장관.....	7
손 숙 미 국회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8
4. 주제발표 : 이삼식 박사.....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5. 토론자:	
1)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9
2)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7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5
4)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65
6 별 첨 (본연구회 관련 기사 및 연혁).....	71

프로그램

1 부.....사 회: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사말씀.....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4) 참석자 소개.....사회자
- 5) 축 사 :

오 영 숙 前 세종대 총장
진 수 회 보건복지부 장관
차 홍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前보건복지부 장관
손 숙 미 국회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 6)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 * 사랑을 위하여
 - * 아데스테 피델레스(Adeste Fideles)-John F. Wade

2 부.....사 회: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 1) 주제발표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2011년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을 시작하며-

- 2) 토론자
 - (1)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2)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4)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 3) 참관자 질의/응답
- 4) 마무리 발언 : 이삼식 박사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올 겨울은 삼한사온이 실종되어 유난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 봄의 기운이 꽃샘추위로 차비를 하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지난 1차 기본계획 기간(‘06~’10)내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다가 OECD평균 출산율(’08) 1.71보다 낮은 1.15명(’09)으로 다시 저조한 상태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가장 빨리 저출산 국가가 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경우는 세계에서 드문 유례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출산율이 낮아지고 회복이 쉽게 되지 않은 것은 사회환경과 가치관이 예측보다 빨리 변화한데다 그 심각성을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출산 관련된 복지정책과 대책을 국가적, 사회적 재난 현상으로 대처하기보다 개인 또는 가족의 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소비의 관점으로 인식을 하고 출산율 제고를 범국가적, 전사회적 노력을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하게 된 결과입니다.

지난 5년간 19.9조원의 예산이 사용된 ‘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개인, 가족 책임이었던 출산, 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역할부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선택적이고 차별화 정책으로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일상화와 그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던 것을 맞벌이부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다른 정책과의 조합과 제 영역들의 상호작용 연계성을 통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하여 국가, 사회, 기업, 가족 등이 공조체계 형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아이 한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7천억이 든다는 발표에 출산에 대한 악영향을 끼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이번 정책발표가 얼마나 실효성이 따를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GDP대비 저출산관련 예산은 0.4%수준으로 OECD 평균 2.3%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늘려 피부 적으로 느낄 수 있게 더 많은 제도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복지정책이 단기적으로,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설령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의 변화와 동참 없이 한다는 것은 복지수요만 늘리게 되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게 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연구회의 목적은 시민 우리 모두가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하게 하는 더 나아가 시민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유관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론회, 강연회, 세미나, 이벤트 등을 많이 해 왔지만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와 같은 순수한 민간 풀뿌리 NGO단체가 이런 토론회를 가진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단체, 기업, 시민이 함께 저출산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저출산 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 토론회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제를 발표를 하실 발표자님, 토론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 완벽한 정책대안 모색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조 할 수 있는 토론회가 분명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 주실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 실장이신 이삼식 박사님은 저출산과 관련 많은 연구와 발표로 최고의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안명옥 이사장님은 17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저출산 관련 의정 활동을 해 오셨고 지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와 관련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님은 저출산극복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독려하시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도미향 교수님과 정부차원에서 참석하신 미래기획위원회 정영훈 과장님께도 패널로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거듭 계속되는 저출산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2. 17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축 사

오영숙 前세종대총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 및 결혼, 출산, 양육의 소중함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삼식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지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 삼십년 전 까지만 해도 자녀를 셋 이상 두어도 비문화인이니, 야만이니, 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 만 낳아 잘 나아 기르자, 라고 했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은 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계획 수립하고 Infra structure 포털 사이트를 필요하다고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능력은 인구에 비례한다.” 라고 저는 감히 정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남,북한 해외동포까지 다 포함해도 1억이 안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IT산업으로 인해 많이 알려졌고 우리의 산업과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이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의 평균출산율 ('08) 1.71 보다 낮고, (09) 1.15 보다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볼 때, 개인이 자녀를 몇을 두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 양육부담, 인구구성원 세대 간의 불균형, 인구고령화로 사회 문제 야기되고 노동력은 세대의 분담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사회복지에 지출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절실한가를 잘 알아서 복지가 낭비가 아니라 정말 사회에 복지가 되도록 복지국가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구세계에서 시작했던 성공사례도 알아보고 국가의 전체적인 모습을 계획 설계하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개인의 생존과 생활은 일차적으로 개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개인 자신이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며 이 일이 안될 때는 근접 해 있는 사회공동체가 해결해야 하고 또 하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국민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변화 해가는 사회속에서 핵가족 안에서 성장 하고 자기중시적인 사고방식과 사회공동체 의식부족, 다양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들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 한다든가 중단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질과 양이 저하되고 소비가 위축되며 산업 경제와 더불어 여러분야가 약화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은 결혼 비용, 육아교육에 관련된 정보 제공,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 확충, 영유아를 둔 직장여성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지 않도록 탄력적인 근무 시간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 강조와 더불어 사교육비 줄이기, 주거지, 젊은이들의 국가관과 사명 등을 고취 시키며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같이 호흡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그 내용을 받아 드림과 동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와 국가 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토론에 참가하심을 감사드리며 선진복지연구회를 위해 애쓰시는 임원들과 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숙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이정숙 회장님과 관계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이라는 과거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 재정부담 증가, 세대간 갈등 격화 등 국가, 개인, 기업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가치관 변화 등 경제·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년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작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신문기사에서 보여지듯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 여성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정내 환경 및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남녀가 공동으로 지고 또 행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일-가정 양립이 당연한 권리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가정 내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해 부부가 책임과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금년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월별 출생아수가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시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이정숙 회장님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관계자분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차 홍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前보건복지부 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본 연구회 고문)

존경하는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님과 내빈 여러분!

오늘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5차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책토론 자리를 마련하신 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등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대단히 뜻 깊은 자리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21세기 세계적 화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지진’, ‘세계의 시한폭탄’, ‘사회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출산 현상이 매우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나타나 장기간에 걸쳐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한 선진국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기부양정책처럼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아이를 한명 더 낳느냐, 덜 낳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치관의 문제이자 문화적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삼대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가족공동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매우 퇴색해져 가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한 가정의 존립과 육성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시기부터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쳐 일깨우고, 보육·의료·교육·주거·취업·노후 등 복지정책 전반에 있어 다세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세금·공과금·보조금·부양금 등도 개인본위가 아니라 가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가족계획사업처럼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정책 방향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손 속 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손속미입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한국보건 연구원 이삼식 박사님, 그리고 시대적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토론을 맡아 주신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년 1.1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비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상복지, 무상보육 등 새삼스레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1차 계획과 달리 맞벌이 부부와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이번 2차 계획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해법 모색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2. 17
국회의원 손 속 미

주 제 발 표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 시행을 시작하며-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실장)

저출산 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¹⁾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1980년 간 인구증가억제정책과 함께 경제 및 보건의료 발달로 인하여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었다. 출산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특성 상, 당장의 문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다. 장기간의 출산억제정책으로 소자녀관 및 만혼화가 증가하고, 교육수준 상승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로 저출산현상은 빠르게 고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구증가억제정책은 1996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으나, 그 후에도 출산율 감소세는 완화되지 않았다. 출산행태 자체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 제반 요인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예로, 여성의 교육열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참가 역시 증가하였으나, 과거의 성역할분업이 지속됨으로써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장기간 지속된 출산억제정책의 홍보로 사람들의 자녀가치관은 이미 소자녀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핵가족화가 확대되어 자녀 돌봄에 대한 가족지원망이 약화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구매비용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적 위기 시 큰 폭으로 하락하나, 경기회복 시 높아지지 않은 비탄력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몇 가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가임기여성인구 감소, 이상자녀수 감소, 젊은 세대가 갖는 기대소득과 포부간의 결함에 의한 출산수준 감소)들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는 '저출산덫(hypothesis of low fertility trap)'에 빠질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저출산 추이는 세대 간 인구규모의 격차를 증가시켰다. 특히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고출산 시기에 대규모로 태어났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2020년부터 차례대로 노인층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 추이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 즉, 인구고령화 수준도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 제 영역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내수 시장이 위축되어 생산적인 재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세수원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사회보장지출 욕구가 높아져 결국 재정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1) 본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이 크게 둔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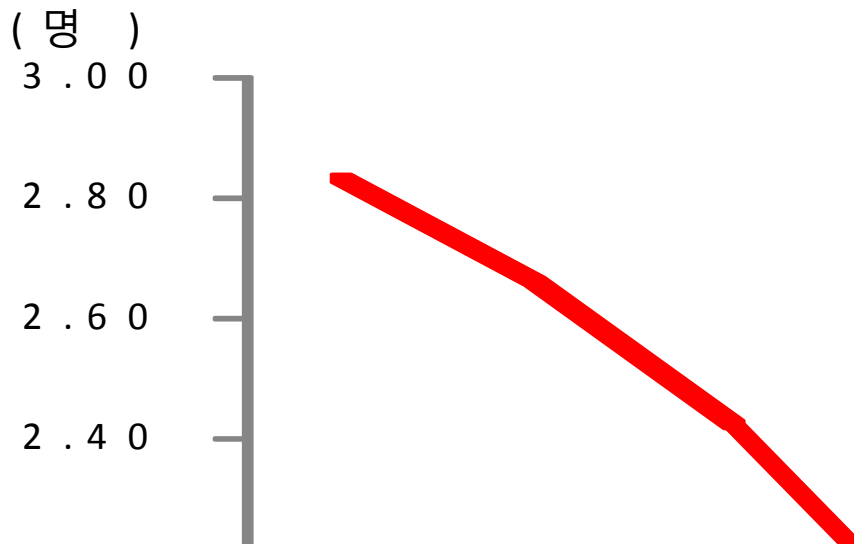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해 ‘지속발전가능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두 기본계획 간에 저출산대책들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와 향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저출산 추이와 주요 특징

저출산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target)를 명료화하여 논의를 화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추이에 내재된 주요 특성 등을 간략하게나마 재조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의 가장 주된 특징은 고출산사회 패러다임에서 저출산사회 패러다임으로 아주 빠르게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초 만해도 6명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불과 20여년 만인 1983년에 2.08명의 인구대체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후 약 2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1.1~1.2명대의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출생아수로 보면 1970년대 초까지 매년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 이후 1980년대에도 70만 명 내외가 태어났으나, 최근에는 그 절반 수준도 되지 않은 40만명대가 태어나고 있다. 요컨대,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세계 최저)으로 떨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인구전환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의 출산율이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1.5명 이상의 저점을 지난 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4년 1.66명을 저점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거의 2명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출산율은 1976년 1.74명을 저점으로 하여 최근 2009년에는 2.04명까지 상승하였다. 영국의 출산율은 2001년 1.63명을 저점으로 하여 2009년 1.94명으로, 스웨덴의 경우에도 1999년 1.50명 저점으로 2009년에 1.94명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았던 독일의 경우에도 2004년 1.24명을 저점으로 하여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 1.38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도 2005년 1.26명을 저점으로 2009년 1.37명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 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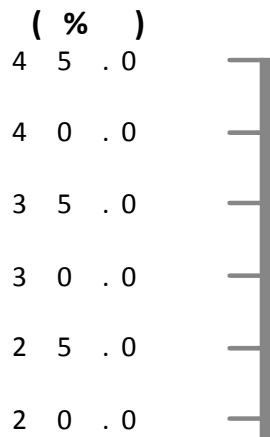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1.1월 검색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은 2010년 현재 11%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으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속도만큼이나 인구 고령화도 가속적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실제 인구 고령화는 세 가지 개념으로 측정된다. 우선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전통적인 개념의 인구고령화이다. 다른 인구고령화의 개념들로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인구고령화 즉,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14%로, 2026년에는 20%로,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38.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가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가 되면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로 부른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즉,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3배 수준인 20%로 상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한 소요기간은 프랑스 155년, 미국 88년, 이태리 81년, 독일 78년, 일본 36년 등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6년에 불과하여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사회는 출산율 추이와 정반대로 ‘향후 30~40년 동안 인구고령화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세계 최고)으로 이행하는’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림 3] 고령화 전망



자료: KOSI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 2009.

두 번째의 개념으로 노동력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척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평균연령이 2005년 38.5세에서 2020년 42.3세, 2040년 44.1세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 개념으로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전체 노인인구 중 중기노년층(75~84세)의 비중은 2010년 30.7%에서 2050년 37.7%, 후기노년층(85세 이상)의 비중은 동 기간 7.0%에서 20.9%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생활 및 건강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욕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결과 경제성장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가 미래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야기할 위험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실로 미래사회의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인, 이민자 등 잠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은 현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한편, 저출산현상은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 구사회위험과 다른 신사회위험 즉, 가족유대의 변화, 아동·노인에 대한 가족돌봄의 피로감, 남성1인생계부양의 한계, 일·가정생활의 양립 곤란, 아동청소년의 안전 위협,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Peter Taylor-Gooby, 2004)의 귀결로 인식할 수 있다. 신사회위험은 복잡한 미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미시적 개인의 위험이 쉽게 사회·국가의 위험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진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현상이 신사회위험의 일상적 확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III. 저출산 대책의 발전과 함의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가. 1차 저출산대책의 기본구조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높은 자녀양육비용 부담, 보육인프라 부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미흡, 고용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제약, 양성평등문화의 부족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저출산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 가지 전략 즉,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그리고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설정하였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정책들이 수행되었다. 만혼화나 비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에 대한 결혼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신혼부부 대상 주택특별공급과 저리의 주택구입·전세 자금 지원 등이 실시되었다.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시설 이용 0~4세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소득계층에 따라 30~100%를 그리고 만 5세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였다. 2010년 현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만 0~4세 보육시설이용아 그리고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 5세 보육시설이용아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아가 있는 차상위계층의 가정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조세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체계를 개편하고, 다자녀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통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육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간연장형, 아이돌보미 서비스²⁾,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³⁾, 종일제 유치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부에게 ‘고운맘카드’⁴⁾를 지원하여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일정소득 이하의 불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과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였다.⁵⁾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등 분만취약지역이 증가함에⁶⁾ 따라 이동 산전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나 산부인과 설치비용 지원 등의 노력을 하였다.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예방접

2)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출장, 야근,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3) 동네 품앗이 육아망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육아망 코치로 양성하고, 온-오프라인 상으로 품앗이를 희망하는 가정을 연결하여 주는 사업이다.

4) 고운맘카드는 임신부에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산전진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현재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 2010년 현재 시험관 아기 시술의 경우, 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1회 1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27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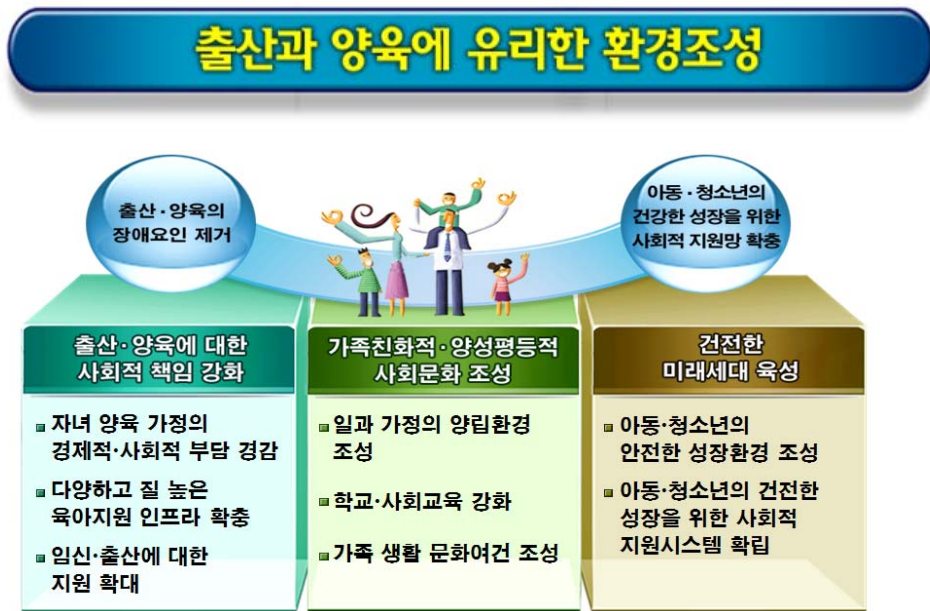
6) 2010년 현재 분만취약지역은 52개로 파악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중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이 수행되었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2008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탄력적 근로제도 등 유연한 근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를 기준으로 매년 가족친화기업을 선발⁷⁾하고 가족친화적 기업경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장려금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학교·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교사용 지도자료를 발간·보급하였으며, 결혼 및 출산, 가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찾아가는 교육 및 지역복지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유형과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였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대책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⁸⁾ 등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대책 기본구조



15

21

7) 선발된 가족친화기업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상품광고 및 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8) 아동발달지원계좌란 지원대상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적금할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펀드로 적립해 줌으로써,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나. 1차 저출산대책의 성과

제1차 저출산대책의 성과로는 우선 외형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제화하여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참여를 유도 ,기본계획 기간 9)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체제적인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1차 동안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7. 12),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7. 12) 등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들을 제·개정하고 과거 출산억제정책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들도 주요한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중 저출산대책 성과

추진과제	세부과제	성과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	1.08	1.12	1.25	1.19	1.15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수	694,843	909,822	1,133,176	1,103,794	1,227,906
		-보육·교육비 지원율(%)	21.9	30.5	40.0	41.0	45.6
		-육아서비스 이용율(%)	48.3	53.2	58.0	59.4	62.6
	방과후학교활성화	방과후 학교 참여율	37.9	41.6	49.8	52.8	59.5
	보육·교육시설 확충	전체 보육시설수	28,367	29,233	30,856	32,149	35,550
		국공립보육시설수	1,473	1,643	1,748	1,826	1,917
		직장보육시설수	263	298	320	335	370
		전체 유치원수	8,275	8,290	8,294	8,344	8,373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운영 보육시설비율	4.7	6.9	9.3	12.2	13.1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63.8	73.3	78.5	89.7	93.7
	임신·출산지원	산모도우미 파견건수	-	10,411	40,087	62,859	53,401
		불임부부 지원건수	-	19,137	14,337	13,269	17,238
		-불임부부 임신성공률(%)	-	31.1	31.0	32.9	31.0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일·가정양립지원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수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육아휴직률	26.0	27.9	36.3	42.5	50.2
		엄마채용장려금 수급자 수	-	-	25	225	20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수급자수	-	-	58	100	222
미래세대 육성지원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아동안전사고사망자(10만명당)	8.7	7.5	6.7	6.3	-
		희망스타트	-	-	4,893	21,810	25,954
		아동발달지원계좌	-	-	28,905	34,263	36,494

주: 2005년 자료는 제1차 기본계획 시행 이전, 2010년 자료는 미제시
 자료: 이삼식 외(2009).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기본계획은 과거 가족(특히 여성)에게 출산·양육 책임을 전가하였던 것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보육, 조세, 사회보험,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들이 동원되었다.

자녀양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결과 육아지원시설의 양적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

9) 예로 2009년 정부, 경제계, 종교계, 여성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발족 등이다.

어졌으며,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 난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를 확립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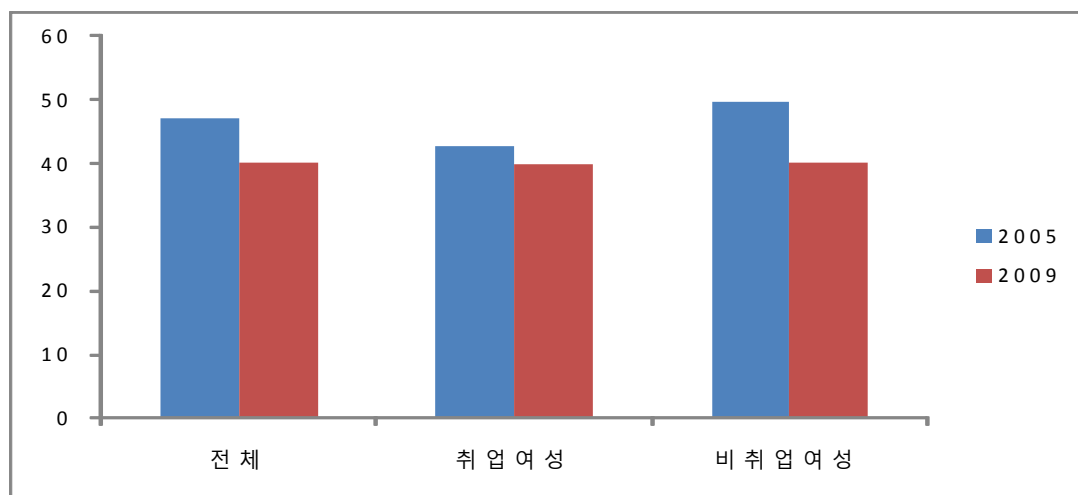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저출산문제와 연계하여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 및 전사회적 노력을 추구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일 중심’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적,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구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은 국가 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장동력의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과 함께 병행 추진됨으로써 정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다. 제1차 저출산대책의 한계

제1차 기본계획 동안 출산율은 큰 진전이 없었다. 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05년 1.08명까지 낮아진 후 2006년 1.12, 2007년 1.25로 상승 후, 2008년 1.19, 2009년 1.15로 다시 하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출산의향이 향상되지 못했다. 예로 1 자녀 취업여성의 출산의향비율은 2005년 42.6%에서 2009년 40.0%, 비취업여성의 경우 49.7%에서 40.1%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자녀를 둔 여성의 출산의향비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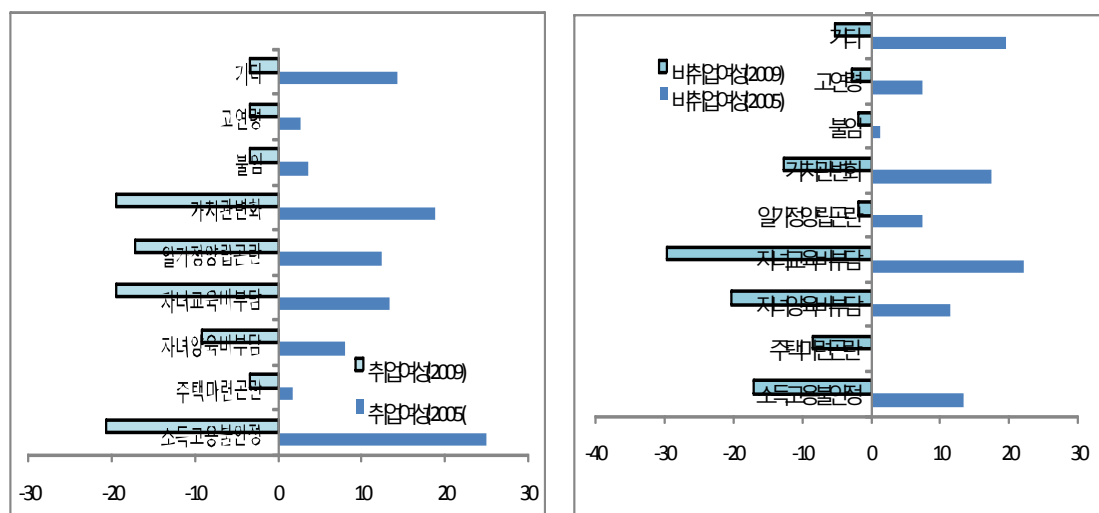
[그림 4] 유배우여성(20-39세)의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의향 비율(%)



자료: 이삼식, 최효진 외(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중단 원인구조(자녀교육·양육비 부담, 소득고용불안,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 곤란 등)도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1자녀 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원인으로 자녀교육·양육비 부담은 2005년 28.5%에서 2009년 43.7%로 증가하였다. 출산중단 원인으로 소득고용불안 비중은 2005년과 2009년 모두 18%수준에서 유지되었다. 1자녀 취업여성(20~39세)의 일-가정 양립 곤란 이유의 비율은 2005년 12.5%에 비해 2009년에 17.2%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1자녀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자료: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외(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제1차 저출산대책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구현이라는 복지 이념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임신, 출산, 여성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을 추구하였지만, 지난 5년간 성과는 출산·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확대·발전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대상은 저출산이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일반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즉, 소득수준, 취업여부, 가족유형, 자녀수, 지역 등 정책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을 제한한 정책들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76.3%(바우처·현금 지급사업의 경우 83.2%)로 비중이 아주 높았다(이삼식 외, 2010).¹⁰⁾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은 2010년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하고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나, 그 대상은 여전히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중산층(맞벌이부부 등)이 배제되어 있었다(육아서

10) 이삼식 외, 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연구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스 이용률이 2009년 62.6%, 보육서비스 구매가 절실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2010년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은 2.1%에 불과), 다자녀가정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구입자금 금리우대 등도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난임부부와 산모도우미 지원도 소득수준 제한(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으로 일부 계층만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휴가 이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등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¹¹⁾ 외국과 달리 출산·양육을 하는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보육, 아동수당, 주거수당, 교육수당 등 핵심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지 못하여, 자녀양육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계속 검토 대상이었으나, 결국 0~1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대체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주체의 측면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가족,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정책 주체의 자원과 책임의 분담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전체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1.2%(노동부, 2009)에 불과하였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수가 2008년 14개소(이중 민간 6개소), 2009년 20개소(이중 민간 12개소) 등 기업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었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율이 2005년 27.5%에서 2009년 6월 63.1%로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007년 32.0%, 2008년 34.0%, 2009년 6월 35.8% 등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다(노동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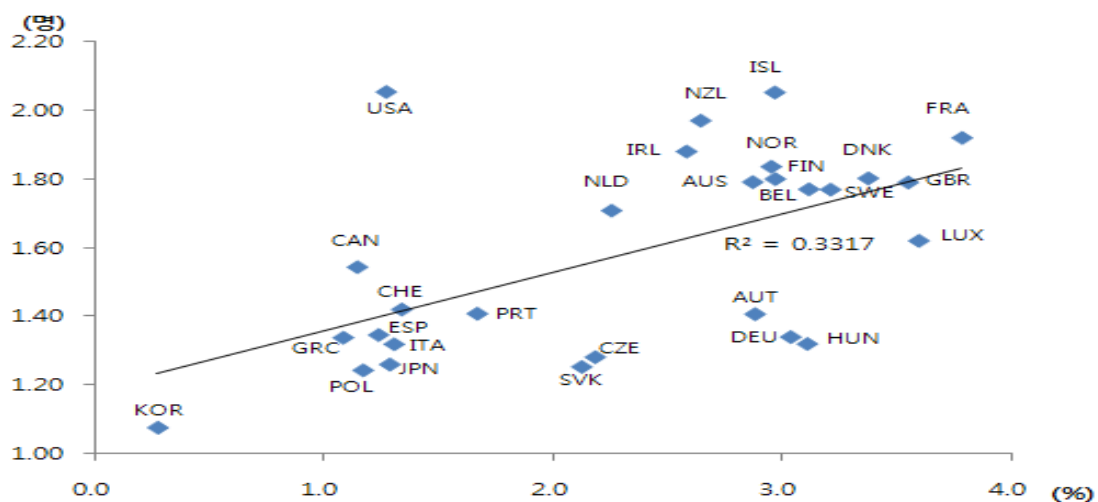
정책 수준면에서는 우리사회가 취약했던 아동권, 모성권, 비임금노동(돌봄)의 사회화, 양성평등가치, 다문화통합가치, 세대통합가치 등의 다양한 권리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 정책의 이념적 가치 실현에 미흡하였다. 사회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정책(제도)과 현실 간의 큰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 곤란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한계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만혼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였다.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위주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시범사업적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가정 학습의 내실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사교육 욕구 및 비용부담 해소에 역부족이었다.

정책 관련 가용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추진전략상의 미진함도 노출되었다. 즉, 선택과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분야별로 정책의 핵심가치를 선명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지난 5년 간 저출산대책에 투입된 예산액은 총 19.9조원으로 GDP 대비 0.4% 수준으로 2005년 기준 OECD 평균 2.3%(프랑스 3.8%, 영국 3.6%, 일본 1.3%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OECD 국가들 사이에 가족관련 재정적 투입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 한정된 예산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효과성이 큰 인프라(시설) 구축에 대한 투입은 1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이삼식 외, 2010).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총 1,917개소로

11)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 시 근로계약 완료일 분포는 90일 이전 41.5%, 90일~30일 이전 19.1%, 30일~완료일 20.8%, 기타 18.6%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산전후휴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07년 77.4%, 2008년 82.2%, 2009년 72.0%(노동부, 고용보험 DB) 등으로 20~30%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경험자 비율은 12.2%에 불과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전체 보육시설의 5.4%(아동수 기준 10.9%)에 불과하여 대기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아(0~2세) 중 37% 이하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영아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이 제약되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확대(2008~2010년간 8개 병원 80병상), 분만취약지역 지원(‘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확대, 산부인과 병의원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비 등 용자 등)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원 실적이 미흡하고 더욱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원가에 비해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설치를 기피하고(산부인과 병의원 용자 2009년 1개소 불과), 산부인과 병의원 설치시 국가에서 50%만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적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찾아가는 산부인과의 경우 2010년 2개소에 불과).

[그림 6] GDP 대비 가족관련 지출비용과 출산율 간의 관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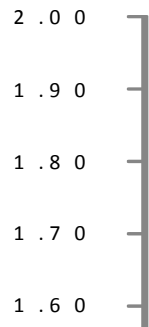


주: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TA(이탈리아),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0.10월 검색(이삼식 외, 2010에서 재인용)

제1차 저출산대책 기간 동안 보육교육비 지원에 전체 예산의 약 2/3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출산율과 보육지원 간의 정적인 상관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기본보조금 지원 등의 전달체계 상 효율성의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점이 비판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자녀 성장 혹은 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했던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네 품앗이 육아당 구축,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일부 사업들은 검토 혹은 시범사업 수준에 그쳤다. 차상위 이하 가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지원하는 양육비는 월 10만원인데, 이는 2006년 0~2세 영아의 1인당 평균양육비 월23만원(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만 포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산전검사료 지원액 30만원은 1인당 평균 산전진찰비용 70만원 중 본인부담 5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육아휴직 활성화(급여) 월 50만원은 2008년 통상임금(206만원)의 2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림 7] 영아(0~2세) 보육 유용성과 출산율 간의 관계, 2006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0.10월 검색(이삼식 외, 2010에서 재인용)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가. 제2차 저출산대책의 기본구조

정부는 2010년 하반기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저출산대책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5년간의 정책기조(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를 유지하되, 정책수요와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대책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의 수혜대상과 정책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제1차 저출산대책이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한정되었던 반면, 제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정책대상을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에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1차 저출산대책에서는 보육 등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회책임 강화)에 집중하였다면, 제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8〕 제2차 저출산대책의 기본 구조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제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휴가 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휴가 휴직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직기간 동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휴직급여를 월 50만원(평균임금의 24%)의 정액제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40%(최저 50만원의 하한, 최고 100만원의 상한)을 받는 정률제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전후휴가제도도 개선하여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폭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제1차 저출산대책에서 도입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¹²⁾’을 도입하고 육아기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족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간호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거부를 제한하였다.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등)를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연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 채용 확대, 스마트 워크센터¹³⁾ 도입 및 확산 등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제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미이행시에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 중에 있다.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제1차 저출산대책에서 추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및 교육, 주택구입비 지원 등을 유지하되, 정책 대상은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차원에서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혜택을 부여하고, 저소득 기혼자에 대한 국가장학제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의 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임부부 지원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

12) 기존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는 사업주에게 허용여부에 대한 제량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이 극히 어려웠으나, 청구권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단축제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제도이용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었다.

13) 스마트 워크센터는 본사가 아닌 원격사무실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시술비 지원 금액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나 예방접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만 0~4세아 보육·교육료 지원대상을 2011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보육·교육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둘째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 후 재고용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시간제,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고, 여기에 더해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와 위기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드림존’¹⁴⁾을 확대·보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 및 인지발달을 위한 서비스 확대, 멘토-멘티 등 휴먼네트워크 지원, 국제교류 활동 및 직업체험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에는 생활안전 교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생활안전 강화,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에는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실시 등이 해당된다.

나. 제2차 저출산대책의 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어느 특정 기간에 한정되기보다 미래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차 저출산대책(2011~2015)은 1차 저출산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14) 두드림존이란 학업중단, 가출, 시설퇴소 등 사회진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2차 저출산대책은 1차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차 저출산대책은 제1차 저출산대책의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1차 저출산대책과의 차별성의 관점에서 2차 저출산대책의 세부 전략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이다. 복지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정책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었다. 최근 여성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가구의 소득구조가 남성1인 소득형태에서 맞벌이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분업적 가족문화 지속,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부재, 가족지원기능 미약, 인프라 미비 등으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이들 가구의 정책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벌이부부와 중산층으로의 보육료 지원 확대,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강화, 시간연장형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등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육아휴직기간 등 단기간이 아닌 자녀 성장의 전 과정에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가·휴직제도의 융통성 제고 및 임금대체수준 향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의 활성화 등 정책들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핵심 과제 또는 주제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이다. 1차 저출산대책에서 저출산대책은 보육정책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저출산현상은 경제, 고용, 교육, 복지, 보건, 문화 등 제 영역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접근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예로 일-가정양립정책은 보육정책이나 가치관 변화 등과 조화되어 수행될 때 더욱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정책 주체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이다. 1차 저출산대책은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하였다. 자녀양육 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인프라 부족, 고용·소득 불안정 등 신사회위험은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 혹은 여성 홀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저출산대책 추진 후 반성은 가족 중 남성 그리고 사회 중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저출산대책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기업, 시민사회단체, 가족 등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사회적 정책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2차 저출산대책의 발전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미래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둘째, 출산·양육의 주체를 가족이나 국가의 양자택일에서 국가-사회-가족 간 분담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즉, 2차 저출산대책은 국가·사회·지원체계 구축,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가족 간 분담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통합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위기를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기 전에 그리고 아직은 고령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속가능사회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IV. 향후 과제

저출산현상이 지속되는 한 저출산대책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될 것이다.

현 2차 저출산대책은 1차 저출산대책에 비해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대책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대책으로서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일부 비용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도 중요하나 사회구조적인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로, 돌봄위기(care crisis)를 극복하기 위한 보육·교육 등의 돌봄체계는 비용, 시간, 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프라의 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가족문화 등 사회문화적 토양을 구축하는 일을 보다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일-가족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대체수준 향상, 인력대체수준 향상,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과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국가 인구위기관리 체계’는 선진국들의 60~100년 간 역사에 비해 훨씬 늦은 2005년에서야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후발 국가의 장점을 가지면서 선진국에 비해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 수준, 대처방법 등에 있어서 부처간 및 사회계층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저출산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회적 및 개인적 긴장성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실로 정책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우리의 저출산 극복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다. 남성은 돌봄 노동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 세대는 미래세대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서 지불하여야 할 희생에 대해 사전적인 그리고 투자의 성격을 가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훗날 노인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여 작용을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을 복지나 소비의 관점이 아닌 미래국가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부처 간 경계를 떠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사회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 간의 이해와 지지를 담보로 할 때, 누구에게나 의미있는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토 론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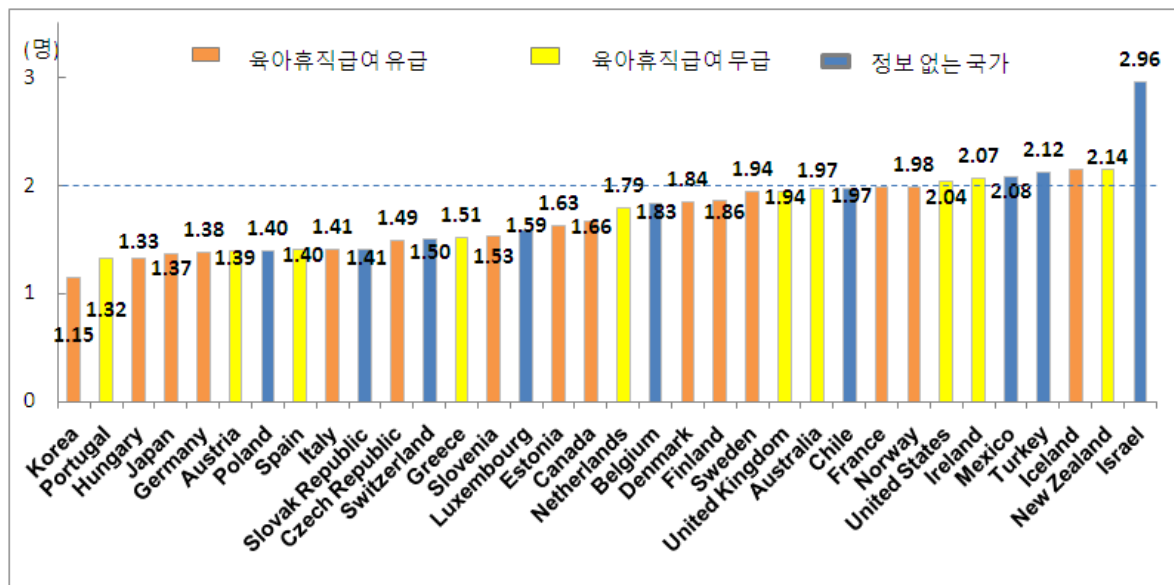
I. 현황 및 문제점

□ 금번 정부의 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자·여성 등 가용 인적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양질의 인적자원 부족, 조세·사회 복지 부담의 급증 및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불안이 예견
— 특히, 고령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

※ ‘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

【 그림 1 】 2009년의 국가별 합계출산율과 육아휴직 급여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보건복지부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2009)

□ 그러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역시 1차 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정 유발적 지원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1차 기본계획(‘06~’10)으로 저출산 부문에 총 19.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합계출산율(‘06년 1.12명→‘09년말 1.15명)은 큰 변화가 없어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 고령화 부문 역시 베이비붐세대 등 고령 인력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순 재정 투입형 노후지원(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에 치중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

※ ‘10년 기초노령연금 3조 7,144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 8,978억원 투입

- 금번 제2차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75.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주택문제, 사교육비용 완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흡

— 자녀를 출산하여 대학 교육까지 소요되는 양육교육비는 2억 6천만원(보건사회연구원)인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 산전휴가 분할 등의 정책은 근로자의 출산 관련 선택을 변화시킬 정도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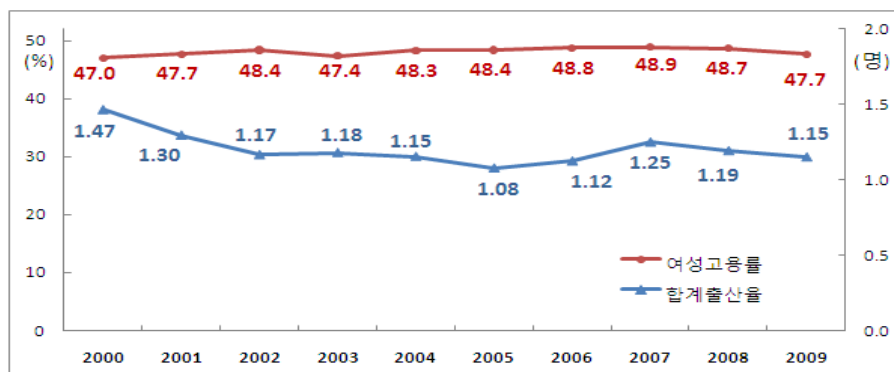
□ 또한 동 기본계획은 선진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인프라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및 기업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00년 이후 여성고용 및 출산 관련 제도는 급격히 강화되었으나 출산율 및 여성고용률은 여전히 정체상태임

◇ 2000년 이후 급격한 제도 강화

- 산전후 휴가기간 확대<60일('97) → 90일('01)>,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도입('02) 및 인상<20만원('02)→30만원('03)→40만원('04)→50만원('07)→통상임금 40%('11)>
- 육아휴직 자녀연령 대폭 확대<만1세미만('87)→ 만3세미만('08)→ 만6세이하('10)>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기업 확대<여성500인이상('91)→ 여성300인 또는 상시500인 이상('06)>, 유사산 휴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06)
- 배우자출산휴가제(무급 3일), 태아검진시간, 육아휴직1회 분할사용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15~30시간) 등 도입('08. 6월)

【 그림 2 】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 DB

○ 앞서 제시한 【 그림 1 】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없는 미국, 호주 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무급 국가 역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서 유급여부와 출산율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99%이상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최상위 제도를 비판없이 도입함으로써 출산보육 관련 제도의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

※ 전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제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연차휴가 사용률이 40.7%(본회 '08년조사)에 불과하나 각종 휴가 강화

※ 최근 경총 조사결과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수는 1일에 불과(대기업 1.5일, 중소기업 0.8일)하나 정부는 3일 유급화하고 5일까지 부여하여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야기

□ 고용·임금 경직성, 근로문화와 노사관계, 공보육 인프라와 가정 내 가사·육아 문화가 다른 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고용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직·간접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져 여성 일자리 감소가 우려

○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가정의 소득 불안정으로 귀결되어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기업 의견은 여성고용 기피(39.8%), 직·간접적 고용비용 상승(35.8%)

— 보건복지부(자료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이상 자녀수(2.54명)보다 현재 자녀수(1.86명)가 적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78.4%)이 다른 요인보다 월등히 높아 근로자의 소득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경제적 요인 외에 '일·육아 동시 병행의 어려움'(7.3%), '자녀를 돌볼 사람 및 시설이 없어서'(6.7%), '자녀를 키우기 위험한 환경'(4.7%)등 순으로 조사됨

II. 정책 제안

□ (유인체계) 기업에게 여성 및 출산 관련 고용규제를 신설·강화하기 보다는 기업 **자발적으로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에 동참토록 하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

○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유인구조는 정부가 가족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지원을 유도하는 것임

— 정부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기업 내 인적자원의 질이 향상되면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므로 다수 기업이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동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임

○ 또한 기업이 부담하고 받아가는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보다 직접적 인센티브(세제혜택 등) 제공을 통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동참토록 하는 유인을 제시하여야 함

※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 구직활동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난 출산 관련 재원(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으로 인하여 적자 상황에 처함

□ (제도 홍보) 현행 저출산 관련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함

○ '08년 6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분할사용, 가족간호휴직 등의 저조한 활용은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의 미흡으로 근로자 인지도가 낮기 때문임에도 정부 및 국회는 규제 신설·강화 방안을 모색

※ 육아휴직의 신규수급자는 '09년 총 3만5천4백명이지만,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09년 31명에 불과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여성정책연구원(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여부는 안다가 30%, 모른다가 70%로 나타남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변경을 논의하기보다 홍보 강화, 의식 및 관행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태관리, 공정한 성과평가, 이에 연동된 임금체계 등 종합적 인사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시간당 업무 분할·단축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사례 축적) 및 컨설팅 제공이 전제되어야 함

□ 현 제도하에서도 기업의 출산 관련 고용부담이 크므로 **제도 신설·강화의 속도 조절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발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대상기간에 있어서 이미 선진국보다 관대한 수준으로 기업들은 과도한 인력 운용 및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 필요

— 현행 우리의 육아휴직 대상(만6세이하), 기간(남녀 합산 2년)을 비롯한 급여수준은 급격히 확대되어, 이미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 육아휴직 대상 : 캐나다 1세, 오스트리아 2세, 일본 14개월, 스페인·독일·프랑스 3세, 벨기에 4세, 영국 5세 등

※ 육아휴직 기간 : 캐나다 8개월, 일본 14개월, 오스트리아 3개월, 벨기에·영국·네덜란드 6개월, 스웨덴 480일(산전후휴가와 통합) 등

— 실제로 산전후 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2개월)의 사용은 업무인수인계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는 보통 15~18개월의 업무공백,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근로자 부담 증가

※ '09년의 육아휴직 급여 지출은 전년대비 42% 증가, 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16.6%('02)에서 50.2%('09년)로 비약적인 증가

— 기업이 휴폐업에 이르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신청대로 허용해야 하는 등 휴직 신청사항에 대한 사업주의 조정 재량이 없어서 현 제도 자체도 경영상 큰 부담

○ 또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유발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높은 할증률을 ILO 권고수준(25%)으로 낮춰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근무시간 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1위의 장시간 근로 국가이나, 노동생산성은 34개국 중 27위에 불과

【 표 2 】 국가별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연장근무	50%	50%	25%	노사	노사	주35~43시간:10%
휴일근무	50%	노사협상	35%	협의	협의	44시간 이상:50%

자료 :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2008)

□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를 완화하고,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결, 부족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가정 내 평등한 육아가사분담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유럽의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률은 만0~2세는 20%~46%, 만3~5세는 60%이상이나 우리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아동수 대비 11%, 전체 시설수 대비 5.5%에 불과

○ 특히 직장보육시설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선호도가 낮고 보육아동수도 적은 경우가 많아, 비용대비 효과성이 매우 낮음

— 유형별 보육시설 중 직장내 보육시설의 이용률(75%) 및 선호도가 저조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은 88.5%, 전체시설 평균은 79.3%이며, 국공립보육 선호도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희망자의 38.9%인 반면, 직장 내 보육시설은 1.8%에 불과(출처 : 보건복지부 2009 보육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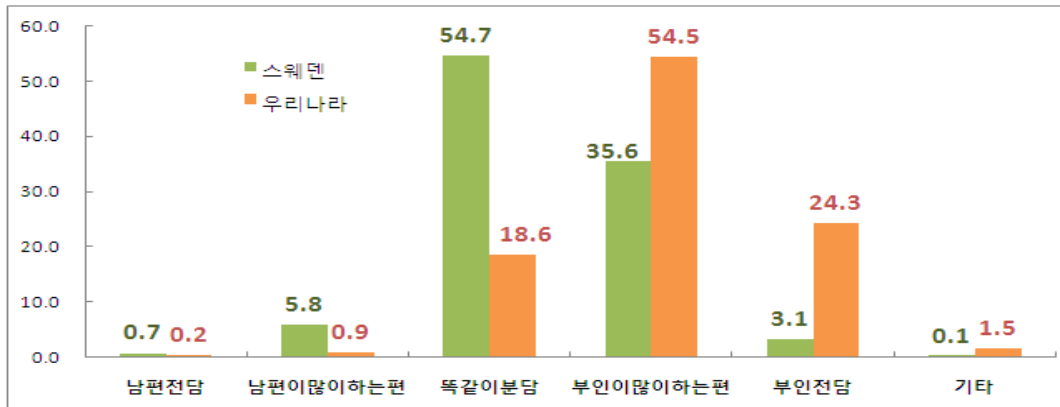
— 스웨덴은 공식적인 직장보육시설이 없고, 최근 교육부의 기준을 준수한 일부 시범적인 운영사례만 존재(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여타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가정내 부부간 가사분담의 평등화가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됨

— 스웨덴 부부 중 가사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50%를 상회

【 그림 3 】 스웨덴과 우리나라 부부의 가사분담 현황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9년 결혼 및 출산동향」, 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또한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은 모성보호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 채용, 해고 경직성 완화로 노동시장내 원활한 취업, 재취업, 이·전직이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 증가, 근로자의 소득안정으로 이어져 더 높은 출산율 달성 가능

- 한편, 복지 관련 예산은 한번 증액하면 축소하기 힘든 속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집중해야 함

- 복지지출을 비롯한 정부재정의 비대화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이른바 ‘유럽의 복지병’을 초래할 것이므로 복지 관련 예산 확대는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

– ‘08년 하반기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출산수당을 폐지하거나 연금수령액을 동결하는 등 복지분야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많은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경험

※ 영국 연립정부는 주당 지급되는 육아수당(첫째 20.3파운드, 둘째 13.4파운드) 수혜대상을 축소(2013년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8천백만원 이상 연봉이면 연 3백~4백만원의 수당지급 중단),

※ 스페인은 신생아 1인당 2500유로 새액감면제도 폐지, 루마니아 정부는 아동수당을 15% 삭감하여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시달림 / 끝 /

토 론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저출산 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

이미 우리 모두가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우리사회의 출산율 저조와 고령화 현상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이다.

우선 아이를 낳을까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본다면, 정부에서의 다양한 정책들 자녀양육비용 확대로 보육료, 교육비지원, 육아휴업, 출산수당, 국민연금 유예혜택, 다자녀 출산수당, 출산지원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마음이 와 닿아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결심하게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벗어날 때까지 교육비와 양육비 등에 절대적 도움이 되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아동수당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효율적인 출산 유인책이라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어쨌든 자명한 사실은 아동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존재이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의 차세대를 육성하는 공동 과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평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가족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출산 및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급선무이다. 또한 모든 아동은 무차별 평등원칙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아동으로서 건전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하게 육성될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도미향, 2010).

한편, 고령화사회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이 또한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고령화의 3대 키워드는 Global, Super, New aging이라고 한다. 글로벌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고령화 문제에 봉착해서 이제 더 이상 고령화는 어떤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Super는 8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급증을 말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30년 이후에는 고령자의 수가 선진국을 추월할 것이다. New aging이라 함은 현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높은 학력, 소득, 건강 등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특성의 고령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한국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빈곤, 질병, 소외 및 안전위험, 지역격차, 세대갈등’이라는 고령화의 그림자로 ‘5대 악(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보건복지부, 2010). 위로는 어르신들을 모셨고, 아래로는 그 자녀들에게 모심을 받지 못하는 소위말해 ‘샌드위치 세대’라 하는 현재의 50대들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고 한다. 물론 그 이후 세대들은 이들보다는 연금이나 다양한 수당, 요양급여 등에 해당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빈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비와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고, 새로운 고령 인력의 경력 활용여부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와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앞으로 추진될 2차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바는 많다.

이에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의 ‘저출산 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에 관한 토론회와 이에 관한 발제는 저출산문제에 관한 이슈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닌 우리 사회와 국가의 장래가 달린 너무나 중차대한 이슈라는 점에서, 또 2차 기본계획이 막 출발하는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 사료된다.

본 토론자는 발제에서 다룬 전반적인 내용과 합의 및 과제에 관해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발제자는 저출산 추이와 주요특징,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관하여 그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명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2차기본계획의 추진내용과 합의에 대하여도 잘 정리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해주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를 토대로 하여 제2차 저출산대책의 과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더 많이 제시되지 않음이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앞으로의 저출산대책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추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발제자가 서론에서 제기한 저출산의 이유에서 과거의 성역할 분업이 지속되고, 소자녀 가치관이 고착되어 있는 것, 가족지원망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은 적절한 분석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1차 저출산대책의 성과로서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과 교육비지원 아동수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점, 보육.교육비 지원을 2배 이상 확대,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임신.출산지원으로 산모도우미 파견건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수와 육아휴직률 증대, 미래세대 육성지원으로 희망스타트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의 사업성과는 지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1차 저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출산의향은 향상되지 못하고, 오히려 1자녀취업 및 비취업여성 모두 출산의향비율이 감소된 것은 근본적인 대책들의 미흡이라 여겨진다. 즉,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라 평가된다.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있어 여성의 만혼화 및 미혼여성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률 증대, 자녀양육부담감 등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그 대안을 여성에 관한 보건 및 보육, 복지수당에 치중하는, 각종 급여를 통해 출산에 따른 수혜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여성들이 출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한 해법은 자녀를 이미 출산했거나 출산할 여성들의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시 고려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휴가휴직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산전후 휴가 급여수급자수가 늘어나고, 육아휴직률이 2005년 26.0%에서 2009년 50.2%로 늘어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공무원이나 교사 등 상당히 안정적인 공공부문 등의 정규직에 해당될 일이며, 대부분의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에 관하여 배타적일 것이고,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복귀인센티브 도입과 더불어 육아휴직제 기간 확대, 육아휴직 시 정원의 추가인력확충, 좀 더 적극적인 가족친화기업 발굴 및 노동유연제 등의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이미 너무나 많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들로 더 이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긴 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등의 형태로 공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하고, 기존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을 제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모들은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보육교사의 질, 즉, 보육시설의 질 때문이기도 하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보육

시설의 경우 200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면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기존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500인(남녀근로자 포함)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은 직장보육시설을 개설하거나 보육료의 50%를 보육수당으로 보육대상 아동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를 미이행하는 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업의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이 있어서 현재의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책만으로는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대안과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과중한 육아비용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 육아비용부담의 문제는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요인에도 포함되는 부분으로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고용불안정은 서로 맞물려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논리일수도 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무엇보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을 만큼 여유가 없어서이며, 육아비용도 높고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극복을 위한 각종 급여수준이 막대히 증대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위기시의 저출산극복이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고용창출은 단순히 빈곤한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므로 노동 시장과 연결된 가족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은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2010년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하고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나, 그 대상은 여전히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중산층(맞벌이부부 등)이 배제되어 있었다(육아서비스 이용률이 2009년 62.6%, 보육서비스 구매가 절실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2010년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은 2.1%에 불과), 또한 주택 공급 관련정책도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제한되었으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사업 등도 일부 계층만이 이용료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고, 현재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절대적 과제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일반 맞벌이 가정, 중산층에까지의 지원확대는 우선적인 과제이다.

셋째, 아동수당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가족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6개국이며(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997), 사회 보험비를 포함하여 복지재정의 삭감 경향을 띠는 최근의 각국의 복지제도개혁 속에서도 가족수당제도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는 모든 가족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보편적 가족수당 제도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표명이기도 하다(조애저 등, 2000). 이러한 보편적인 가족 및 아동복지서비스라는 관점에서의 아동수당만이 출산율의 증가에 관한 해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을 늘린다고는 하나 이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족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세제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건복지 및 영유아지원서비스에 관한 통합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모성, 영유아 보건진단센터, 보육정보센터(가족지원실,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 사업,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사업) 사업

은 물론 필요하고 당위성 있는 적절한 정책이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성과달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보건복지 및 영유아지원서비스 등의 네트워크구축과 통합적인 서비스센터가 필요할 것이다. 즉,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보건과 영유아의 적절한 보육과 발달에 적합한 포괄적 서비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과 더불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져야할 부모역할과 의사소통의 방법, 부모교육,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등의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를 위하여 2009년 각 지자체별로 발족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경우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하는지의 구체적인 사업지침, 사업의 연계성을 위한 예산 등은 부재하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평가를 실시한다면 출산장려사업 가이드라인과 함께 출산기금조성(국, 도, 시비 일정비율로 기금조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구조구조를 보면 정형가족이 70%, 1인가구, 비혈연가구가 21%, 한부모가구, 손부모 손자녀가구는 9%에 달한다(통계청, 2008). 즉, ‘비정형가족’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가치는 매우 보수적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높여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¹⁵⁾.

그리고 미혼모의 직접 양육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다각적 지원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관한 서비스의 확대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대안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정책추진 주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해체와 국제이혼 증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¹⁶⁾. 즉,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은 사회통합 제고를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글로벌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과 더불어 경제위기하의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성은, 2009).

여섯째, 자녀 출산에 관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 결혼 및 자녀가치관에 관한 한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09)에서 보면 자녀출산의 필요성의식에서 ‘가능하면 낳는 것이 좋다’라고 41.5%가 응답하여 이는 ‘가능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임의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반드시 아이는 낳아야한다’라고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리고 기혼 유자녀 집단이나 취업주부에서 ‘자녀를 꼭 낳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서 가족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된다면 출산율 제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의 가장 주된 특징은 고출산사회 패러다임에서 저출산사회 패러다임으로 아주 빠르게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 관한 대책으로 학교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교사용 지도자료를 발간·보급하고, 결혼 및 출산, 가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찾아가는 교육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그 파급효과는 미약한 듯하다. 우선 ‘저출산

15) 2005년 기준 여성가구주 빈곤율 40%(김수정, 2008), 2006년 기준 자녀 1인당 양육비 91만원(김승권 외, 2006).

16) 국제이혼은 전체 이혼의 7% 통계청(2007).

은 국가적 위기'라고 위험을 경고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지하게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녀를 두는 것에 관하여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자녀를 둠으로서 가족을 이룬다는 든든함이 있고,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음
-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는 나를 이해해 주고, 따라주는 마치 동지와 같은 느낌이 듦
- 부모로써 내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즐거운 일임
- 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이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보람찬 일임
-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운 일임
-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서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즐겁고 보람된 일임
- 자녀가 이루는 학업이나, 사회적 성취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임
-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소망을 이룰 수도 있음
- 늙으면 자녀로부터 심리적, 신체적 및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부부 사이를 정겹게 이어주고, 부부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 줄 수 있음

그리고 자녀출산의 중요성 인식에 관하여 체계적 교육을 위하여 출산장려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단 출산장려를 홍보할 수 있는 표준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예비군 교육장, 대학, 기업,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영유아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해 자녀양육 시의 행복한 부모-자녀관계 등을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근의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행 및 평가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저출산 정책은 그 당위성이나 시급성 혹은 정책적 전문성이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전담기구들의 전문가들을 통한 체계적인 추적 작업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 확보,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제의 내실화, 자발적인 시간제 고용모델 개발, 아동수당 지급 등의 단일시책보다는 복합적, 통합적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저출산 대한민국과 생명의 가치, 가족의 가치

I. 들어가는 글

여러 상황으로 우리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부담이 확대되며 가히 ‘여성의 반란’, ‘출산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더하여 생명에 대한 가치, 가족의 가치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복잡한 형태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양상까지 관찰됩니다. 2009년도에 출산은 1970년 이후로 사상 최저인데 예방 가능한 사망이기도 한 자살은 최고 수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은 나날이 증가하고(2009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5,413명으로 1일 평균 42.2명<34분에 1명꼴> 자살했습니다. 자살자수는 전년대비 2,555명<19.9%>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범죄피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2008년의 경우 1,551명,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2008년 5,870명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1인 가족에서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하여야 저출산도 해결되고 자살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행복공동체’ 대한민국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새 세대의 아기, 어린이, 청년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여정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 야 할 것입니다.

10여분의 주어진 시간 내의 토론으로 우리나라 현 상황과 미래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 틀림없는 이 거대한 메가트렌드인 ‘저출산’에 대한 논의와 해결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론문은 1장에 불과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2010년 연말 두 번의 토론회, 2010년 10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토론회, 헌정회에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토론회’에서의 제가 발표했던 부분을 발췌하여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생각과 의견의 일부를 참고하셔서 더 좋은 대책, 더 훌륭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토론문을 작성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전되어 온 저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인 부분의 변천에 대한 부분을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어 2010년 말에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가지 정답만이 있는 문제가 아닌지라 다양한 분야의 지혜가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은 해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보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종합하고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학문적 배경과 17대 국회의원 시기, 대선, 총선 공약을 만들면서, 또 인수위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TF 책임자로서 이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정책입안자로서의 경험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일이라 여겨집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와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1979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인턴을 시작하면서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증가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화두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산부인과에 몸담고 있으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출산 억제제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의 실체를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그 이후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시대의 가족계획을 정책화해야 하는 최근 추이의 역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미국 UCLA 보건대학원에서의 석, 박사 전공 주제가 ‘인구 및 가족보건’이었고 그에 대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는 community health science라고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구 및 가족 보건은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인문학이 그 근간을 이룹니다. 한편 community health science는 좁게 말하면 굳이 지역사회보건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인류 공동체 건강 과학’입니다. 인연은 이리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은 1989년 제가 미국에서 잠깐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을 때, 이미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지표, 특히 합계출산율은 이미 저출산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구학자로서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열심히 출생증명서의 선진화 주장을 함께 펼치면서 문제 부각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만 한 학자의 고민은 정부 부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2000년 영구 귀국하면서 그 안타까움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시각은 점차 현상으로 보면서 문제시하고 있었으나 인구문제의 양대 축의 한 축인 저출산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진출하면서 그동안의 생각을 모아 17대 국회 첫 의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필두로(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5/31/2004 제안하여 5/4/2005 본회의 통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해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정법인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을 발의하여 최종 목적이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케 되었습니다.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을 2004년 9월 4일 발의, 2005년 4월 18일 상임위 통과, 국회본회의 2005년 4월 26일 통과하고 법안으로서 동년 5월 18일 공포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안에 근거하여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번 2010년 9월 10일에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이 발표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간 학자로 저출산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것도 가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국가의 아젠다에, 범국민적 인식 속에 ‘저출산 문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다학제간, 다세대간, 다변적으로 통섭적 접근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며 ‘임산부의 날’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II. 임산부의 날

2010년 10월10일은 ‘제 5회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법정 기념일 제정이 되고 5회째입니다.

국회에서 2005년 10월 10일을 기념하여 “임산부의 날”을 축제로 기념하였으므로 저에게는 특별히 6회째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저출산이 문제라는 소리는 요란한데, 아쉽게도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달력은 찾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갖고 계신 달력을 한번 살펴주세요. 올해도 임산부의 날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호만 요란한 저출산이지요.)

또한 2005년 처음 ‘임산부의 날’을 선포하며 이 날이 진정 이 세상의 생명을 존중하고 온 삶이 행복한 날을 기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이 날이 유엔으로 가서 전세계의 임산부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이 일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임산부의 날’ 제정을 2000년도부터 개인적으로 추진해왔던 일이라 저는 이날이 특별하게 다가

읍니다. 10월10일, ‘임산부의 날’ 제정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여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정점을 차지합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산부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날인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하고 강조하는 의미가 더해 있는 날입니다. 10월 10일로 정한 것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10이라는 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우리는 보통 임신기간을 10달이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수태의 순간이 아닌 난자의 성숙일까지 포함하면 280일, 또 정자가 성숙을 시작하는 날까지 합하면 300일이 넘습니다. 우리 전통의 임신 10달이라는 개념은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시작부터의 셈(음력으로서는 특히 더 10달이라 할 수 있지요)입니다.

둘째, 아라비아 숫자의 10이란 완벽의 숫자, 그리하여 완벽을 지향하는 생명의 신비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사계절 중 10월의 가을은 가장 아름답고 높고 청명한 하늘의 계절입니다. 또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수확의 계절, 모두에게 가득함과 풍요로움, 행복의 계절이라 또한 10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새 생명의 탄생으로 가족은 행복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세대의 언어로 , 말하면 1, 0, 1, 0, 디지털(digital)의 수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하는 미래지향적 진취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젊은 친구들의 호응도 고심하면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계획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10월 10일이 $10 + 10$ 이 아니고 10×10 을 넘어 10의 10승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새 생명,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인 아기들이 1당 100, 1당 10의 10승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0의 10승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우리의 미래인 아기들이 10의 10승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기리는 날, 우리의 미래를 잉태하고 사랑으로 기르는 임산부를 여왕으로 모시기를 기념하는 날, 임신과 출산과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정색하면서 생각해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께서 요즘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자식 낳기를 포기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태어난 예쁜 아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그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장된 사회,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공동체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행복감을 주는 사회라면, 아기 낳지 말라고 말려도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자 우리의 미래 자체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 사람 한사람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행복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이 국민적 화두가 된 후 우리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출산율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NGO),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사회지도자들이 모여 범국민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의 구체적인 방향이 이 땅의 여성과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비로소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 개개인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잉태한 어머니들이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임산부의 날’은 어머니들과 예비 엄마들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보호하겠다는 국민적 다짐의

자리입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산부의 날’ 하루만 기념하고 끝내서는 안 되며, 모성을 가진 생명의 원천인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1년 365일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1년 365일 여성과 어머니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면 미래의 소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것이며, 저출산도 극복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특히 모성태아학 세부전공의 학자이기도 한 저는 임산부들과 사랑하는 태아들에게 더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엄마나 아빠보다도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서의 영광됨과 축복을 지닌 의사로서 생명의 신비에 깊이 감동하고 있는 터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들과 임산부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분위기 확립이야말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행복하고 밝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참고: 오늘 논의하는 많은 부분들이 저의 블로그에 제가 펼치고 있는 지식공유의 일환으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dramo23>)

III. 저출산 현상

A. 전국적인 출생 통계

저출산의 추이와 현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표로서 정리해 봅니다. 아래 표는 1970년부터 1989년까지는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고 1996년부터의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 자료부터 천단위로 표시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70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1. 출생아수, 2. 가임연령인구(15-49세 가임 연령 여성인구, 그리고 분석을 돕기 위한 20-39세 여성인구) 3. 합계출산율 만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출생아수는 태어난 아기의 수입니다. 더 학문적으로 정확히 말하려면 복잡하므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2. 가임여성은 학문적으로 15세부터 49세를 말합니다. 물론 13세, 14세에도 임신할 수 있고 50세 넘어서도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드물기 때문에 제외하고 추정으로 가임연령의 정의를 15-49세로 정의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학문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20-39세 사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에 편의상 추정해본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2004년 국회에 가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도 매년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여 분석에 도움을 받고자 그 연령대의 인구수를 더한 것입니다.

3. 합계출산율은 가임연령 각 연령 마다의 출산율을 합한 수입니다. 우선 학문적으로 잘못된 인용에 대하여... 합계출산율이 실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어가 의미하는 “(비)율”이 아닌데 별 의심 없이 합계출산율 -명 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할 때 ‘합계출산율’의 정의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 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적으로는 -명이라 하지 말고 수자만을 말해야 합니다. 즉, 200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명이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 연도별 < : 1970- 2009 출생아수, 가임여성 인구 및 합계출산율 >

연도	출생아수(명)	가임연령인구	20~39세여성 인구	합계출산율
1970	1,006,645	7,437,443	(4,437,338)	4.53
1971	1,024,773	7,647,085	(4,493,715)	4.54
1972	952,780	7,896,509	(4,595,341)	4.12
1973	965,521	8,155,124	(4,689,596)	4.07
1974	922,823	8,422,299	(4,795,544)	3.77
1975	874,030	8,718,893	(4,943,745)	3.43
1976	796,331	8,994,787	(5,098,581)	3.00
1977	825,339	9,256,777	(5,259,699)	2.99
1978	750,728	9,510,966	(5,433,443)	2.64
1979	862,669	9,743,437	(5,622,333)	2.90
1980	862,835	9,959,366	(5,819,554)	2.82
1981	867,409	10,177,558	(6,031,202)	2.57
1982	848,312	10,394,883	(6,233,261)	2.39
1983	769,155	10,623,337	(6,434,451)	2.06
1984	674,793	10,859,418	(6,630,623)	1.74
1985	655,489	11,072,131	(6,794,166)	1.66
1986	636,019	11,307,616	(6,972,643)	1.58
1987	623,831	11,537,880	(7,136,269)	1.53
1988	633,092	11,751,803	(7,295,613)	1.55
1989	639,431	11,947,301	(7,468,923)	1.56
1990	649,738	12,127,623	(7,699,671)	1.57
1991	709,275	12,272,963	(7,887,419)	1.71
1992	730,678	12,403,539	(8,050,964)	1.76
1993	715,826	12,791,622	(8,425,019)	1.65
1994	721,185	12,936,974	(8,546,396)	1.66
1995	715,020	13,122,152	(8,596,573)	1.63
1996	691,226	13,325,000	(8,597,000)	1.57
1997	668,344	13,485,000	(8,591,000)	1.52
1998	634,790	13,592,000	(8,552,000)	1.45
1999	614,233	13,658,000	(8,499,000)	1.41
2000	634,501	13,716,000	(8,446,000)	1.47
2001	554,895	13,774,000	(8,441,000)	1.30
2002	492,111	13,785,000	(8,363,000)	1.17
2003	490,543	13,758,000	(8,278,000)	1.18
2004	472,761	13,729,000	(8,202,000)	1.15
2005	435,031	13,670,000	(8,094,000)	1.08
2006	448,153	13,615,000	(7,991,000)	1.12
2007	493,189	13,579,000	(7,875,000)	1.25
2008	465,892	13,532,000	(7,727,000)	1.19
2009	444,849	13,461,000	(7,570,000)	1.15

우리나라 앞으로의 인구에 대한 생각을 이 3가지 수 만으로도 여러 놀라운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실행이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비쳤는지를 관찰할 수도 있고 문화적인 트렌드가 어떤 놀라운 영향을 주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04년에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2009년의 출생통계는 그동안의 모든 집약된 현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로서 우리는 2010년, 2011년의 상황도 일단은 대략적 예견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예견 등 자세한 부분은 역시 저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dramo23?Redirect=Log&logNo=87047364>, <http://blog.naver.com/dramo23?Redirect=Log&logNo=87230256>)

B.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상위 10위와 하위 10위 합계출산율 시군구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분석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논의도 끝도 없을 것이므로 일단 자료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합계출산율 상위 시군구와 하위 시군구를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위가 부산 서구(0.73)이고 하위 10위권에 5지역이 부산이고 하위권 모두가 대도시에 속합니다. 왜 일까요? 상위군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1. 전국 합계출산율 상위 10위 시군구

출산율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순위	시·군·구	합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	전북 진안군	2.06	8.5	51.2	145.5	158.1	44.1	4.7	1.1
2	전남 강진군	2.00	4.6	35.5	140.7	160.1	51.2	9.9	0.7
3	전남 영암군	1.97	7.2	53.4	180.0	115.6	34.3	6.3	1.0
4	전북 임실군	1.92	2.8	34.8	127.0	167.8	43.2	5.1	0.0
5	강원 인제군	1.81	1.2	36.3	175.7	123.3	22.5	7.0	0.0
6	경남 거제시	1.80	2.8	42.3	166.6	119.9	27.6	3.8	0.1
7	경기 화성시	1.77	2.0	33.8	157.5	130.5	33.1	4.5	0.3
8	강원 화천군	1.75	0.0	47.2	159.8	104.7	33.1	4.3	1.3
9	전북 완주군	1.72	1.4	48.3	139.8	124.3	31.7	4.7	0.0
10	전남 광양시	1.70	2.4	33.0	159.1	114.8	24.8	4.2	0.0

2. 전국 합계출산율 하위 10위 시군구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순위	시·군·구	합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	부산 서구	0.73	0.8	10.8	38.9	66.5	23.6	3.8	0.0
2	광주 동구	0.74	1.5	9.9	39.9	71.4	22.5	3.6	0.0
3	부산 영도구	0.75	1.7	10.6	44.4	67.7	20.7	4.7	0.0

4 대구 서구	0.77	2.7	11.2	50.9	67.0	19.9	1.7	0.2
5 서울 강남구	0.79	0.1	3.4	37.8	82.9	30.3	3.6	0.2
6 서울 종로구	0.80	0.0	7.7	39.2	79.5	28.1	4.1	0.0
7 대구 남구	0.80	1.5	12.9	45.4	75.9	23.4	2.5	0.0
8 부산 금정구	0.81	1.6	7.8	45.2	82.7	21.9	1.4	0.2
9 부산 수영구	0.81	0.4	8.5	44.4	85.9	21.3	2.5	0.2
10 부산 중구	0.85	1.6	10.9	40.5	78.8	35.4	1.7	0.0

IV. 국회 내에서의 경험

정책에 관한 부분은 저의 국회에서의 일련의 정책과정을 소개해 봅니다. 국가의 아젠다화 되는 과정의 국회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현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일부 소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국회에서의 활동은 17대 국회 첫 의안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필두로 17대 국회 첫날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은 2004년 당시에는 미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위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저출산 현상을 강조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법안 공청회를 여는 날의 저의 소회와 한마디 한마디 제 생각이 녹아난 발제(주제발표)의 발췌입니다. 그날의 주제발표 발제문과 자료(두꺼운 자료집)는 이곳에 실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그 후로도 저출산과 관련된 많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만...이의 일부 자료가 역시 블로그에 있습니다.). 정치인의 생각과 활동으로 한 이슈가 국가적 아젠다가 되는 과정의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2004년 즈음의 생각을 나눕니다.

“오늘 2004년 9월 1일은 참 저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17대 국회의원이 되고 정기국회 첫 날이 하고 한나라당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task force’ 팀의 팀장으로써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법안의 한마디 한마디를 심혈을 기울이며 정성을 들였고 오늘의 주제발표를 위하여도 한마디 한마디 저의 철학과 열정을 담 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발표를 소개하렵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꿈과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애칭으로 ‘무지개법안(rainbow act)’ 의 앞날에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4년 9월 1일

국회의원 안명옥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TF팀장)

1. 머리말

지난주(2004년 8월25일) 통계청이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 통계가 공식 발표될 시점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지난 4개월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시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러한 각고의 노력끝에 마련된 것입니다.

‘출산사회대책기본법’ 시안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당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TF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7월 2일 ‘저출산 대책 대토론회’ 등을 거쳐 꾸준히 진행돼 온 결과물입니다.

흔히 “미래는 불확실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닥칠 문제입니다.

국가 및 사회 전체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긴급한 국가적 현안이지만, 우선 우리 한나라당만이라도 적극 나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 분야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좀 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미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제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 8월22일 싱가포르의 신임 총리 리셴룽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국경일 연설에서 저출산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출산장려책이 아닙니다. 사회 가치의 재정립 문제입니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대책을 모색하기에 앞서 혼인, 가정,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본인식부터 바뀌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닥칠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출산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지도자의 미래지향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치적 의지’가 담긴 미래지향적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이해와 지지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닥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과연 나침반 없이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갖고 항해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2. 통계청 발표의 의미 분석 : 정책적 함의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는 우리가 마련한 기본법안과 크게 두가지 대목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 출산율이 2002년에 비해 미미하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 상당기간 그럴 것이란 우울한 예측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저출산 추세가 계속 앞서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정책이 현상의 뒷북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두고 ‘압축성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경향 역시 ‘한국형 압축 저출산’ 추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 이유는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 폭에 비해 아기를 낳을 가임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임여성의 감소 현상은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와 인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만혼화, 만산화 및 비혼화 혹은 독신화 추세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장래 인구감소 추세의 가속화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추세를 단순히 인구정책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부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족정책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고령화 대책과의 연관성

제 발제문에도 들어있습시다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 문제의 시작이자, 이런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 대책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의 현재’의 도전을 겨냥한 것이라면,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래에 확실하게 다가올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발의한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과 우리 한나라당이 준비한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은 조화롭게 연계되어 정책추진에 기초가 돼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활동과도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당 및 야당의 관심과 함께 청와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다가올 미래의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전체에 미칠 파장을 가급적 줄이는 노력일 뿐입니다.

4. 기본법 구성 설명과 주요 고려사항들

다음은 기본법을 구상하면서 고려했던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996년 종래의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신인구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의 자질향상과 보건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현 정부들어서 코 앞에 닥친 고령화사회의 갖가지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고령화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저출산 문제에 대비할 기본적 틀이나 기본법안

마련에는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의한 기본법은 정부의 고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출산을 저하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행위는 가족 구성원, 나아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의 고독한 역할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 등을 바로잡고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에 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 모든 당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 법안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잉태한 존귀한 존재로서 임신부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태아 역시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받을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임산부 및 태아의 권리’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임신부와 태아의 존귀성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률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育兒를 개인이 아닌 사회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보육체계’ 구축에 사회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출산장려책이란 단순한 처방만으로는 가임여성들이 선뜻 出産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요즘 사회현상에 비춰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출발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가정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필수적으로 감안해야 할 ‘양성 평등’이라든가 ‘영아 및 유아들의 건강관리와 육아대책’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조화를 찾는 노력이 저출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하는 판단에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5. 예산 배정 등 현실성 항시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어떤 법안이든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 배정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의한 법안 역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의 추가부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기 이전에 기존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저출산 추세를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 가족윤리 등에 걸맞는 우리 나름의 ‘한국형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저는 한국형 저출산 기본대책에 ‘무지개 계획’(Rainbow Plan)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무지개 법’(Rainbow Act)이란 이름, 혹은 애칭이 붙여지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추세가 어느 나라 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단 정책이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전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 전문가 분들과 참석하신 각계 인사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법안 및 정책

그 후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 위원회가 제 의안에 의해 구성되어 지고 모든 정당(bi-partisian)이 참여하고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특별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웃지 못할 부처간의 물이해를 목격하면서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방향은 크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며 대통령 직속 범부처 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부처가 장관급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부와 투쟁을 불사하며 만들었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위원회’의 그 지위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달라지게 된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정책은 입법화 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신속하며 힘 있게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가 가히 법률적인 부분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방적 전략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engineering방법입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인 극대화된 효율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법안들은 제가 입안하여 발의한 142건의 발의안 중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관련 제정법, 개정법들이고 이들이 정책으로 바뀌어 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미 제정,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도 있고 아쉽게도 17대 국회에서 회기가 끝나며 자동폐기된 법률 개정안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18대 의원님들이 다시 의안 발의를 하신 법안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법안이 각기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과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명옥의원 17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제안 법안

[총 51건(통과:17건)]

연번●의안번호●법안명●중심 내용●상임위

- 1 1702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시 안전용기 포장사용을 의무화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 (보복위)
- 2 17021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용기포장사용을 의무화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 (보복위)
- 3 1702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화장품을 판매 시 안전용기포장사용을 의무화함 (보복위)
- 4 170382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저출산사회대책의 기본사항을 규정.
(보복위)
- 5 1706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증진내용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명시함 (보복위)
- 6 171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의 법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및 산후조리원의 근거규정 마련함
1)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산후조리원'의 정의규정을 신설 및 '가족보건복지사업'으로 변경.
2)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
3) 모자보건 통계 보고 사항에 '신생아출생'에 관한 사항을 명시.
4) 인공임신중절행위 규정범위를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함. (보복위)
- 7 171614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정년 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하고, 근로자의 연령, 정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함 (환노위)
- 8 1716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함.(환노위)
- 9 1716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직종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아동학대 신고규정을 의무화
(보복위)
- 10 1718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인 노인실태조사 실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복위)
- 11 1720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설·학원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함.
(보복위)
- 12 17204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교육위)
- 13 1720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교직원에게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교육위)
- 14 1720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 사자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여가위)
- 15 172052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 및 교직원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위)
- 16 1722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구급차등을 운용 (보복위)
- 17 1723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재경위)
- 18 1724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수유시설 등에 육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시설 및 고궁, 박물관,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함 (보복위)
- 19 1730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에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추가함 (보복위)
- 20 1737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교육의 대상에 둘째이후 자녀인 유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유아를 추가함 (교육위)
- 21 173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특례 대상에 입양된 영유아와 둘째 이후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함 (여가위)
- 22 174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하려는 직장 근로자들에 대해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환노위)
- 23 17423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과 함께 보내는 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둘째 및 넷째 수요일로 ‘가정의날’을 변경
(여가위)
- 24 174275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교육위)
- 25 174400 국민요양보장법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제공 (보복위)
- 26 1744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요양관련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포함함. (재경위)
- 27 17443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대상을 「아동복지법」 제29조를 위반한 죄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유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호
전문기관에의 교육위탁 과정을 신설함 (법사위)
- 28 1744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우대자에게 지급된 수발비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해당연도 근로소득 금
액에서 공제함 (재경위)
- 29 1744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

- (보복위)
- 30 1744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과 추석 연휴 1일씩 늘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함
(환노위)
- 31 1747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해자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규정을 신설함. (보복위)
- 32 17497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시민의 인명구
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
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보복위)
- 33 174979 자살예방법안
자살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함. (보복위)
- 34 175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유해사이트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함 (법사위)
- 35 17555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자살예방 (법사위)
- 36 1755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자살예방 (과기통)
- 37 17556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자살예방 (과기통)
- 38 17556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자살예방 (과기통)
- 39 1762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접이식 발코니 설치하여 노약자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
(건교위)
- 40 1763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괴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교육위)
- 41 1763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확인자료요청시 즉시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정통위)
- 42 1763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괴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건교위)
- 43 1763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괴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보복위)
- 44 1763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괴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교육위)
- 45 17658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가정 신청시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공 (보복위)
- 46 1770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서 학력, 연령 삭제 (행자위)
- 47 177820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관련 산업육성 및 서비스지원등에 관한법률안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보복위)

- 48 17782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 안전마개사용 (농해위)
- 49 177829 상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의 공정거래를 확립함. (정무위)
- 50 177946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등의 정의에 65세 노인포함시킴 (보복위)
- 51 1779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실종의무를 규정 (보복위)

V.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TF’

17대 국회의원 시절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은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TF’ 팀의 책임자로서 18개 부처의 그동안의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모든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모으고, 300여개의 학회, 협회, 단체 및 NGO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문가들 및 엘리트 공무원들과 늦은 밤까지 끊임없는 토론의 시간을 보내고 밤을 지새우며 ‘초일류 국가를 위한 드림플랜 - 저출산 고령사회 발전전략’인 대한민국 미래사회 보고서를 만든 일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일을 하며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는 통합적, 통섭적 계획을 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보고서의 목차의 일부입니다.

위낙의 최종보고서는 방대한 양이지만 이 목차는 커다란 줄기의 정책분야, 큰 틀의 제목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고민하시는 데 참고자료로 제시합니다.

2007년, 즉 4년여 전 만든 자료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극복에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시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섬세한 정책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실상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한된 시간동안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서 여러분들의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의 화두를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VI. 맺음말

우리사회의 저출산 극복은 가족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과 긴밀한 그물망과 같은 포괄적인 체계적 접근방법으로만이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극히 개인적 영역인 출산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힘듭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개괄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1.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출산대책은 단순히 출산장려책이 아닙니다. 사회가치의 재정립문제입니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대책을 모색하기에 앞서 혼인, 가정,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본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닥칠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출산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최종 열쇠는 직접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개개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출산, 가족,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를 기해 나가야 합니다. 일생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는 국가 법정기념일인 ‘임산부의 날(매년 10월 10일)’이 생명에 대한 가치와 소중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널리 퍼지는 운동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5회에 이르는 올해이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달력에도 법정 기념일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력을 제작하실 때 인쇄소에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운동이 계몽의 시작이랄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자녀존중, 생명존중, 임산부 존중의 범국민운동이 일어난다면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잉태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출산율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임신부를 여왕으로 우리의 예쁜 아기들은 옥동자, 옥동녀로서 존중하려는 생명존중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임산부의 날’ 제정을 한 저의 바램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특히 요즈음의 경제사정의 열악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관의 혼돈과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함께 기른다는 가치관의 확산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도 이는 중요하고 사랑이 가득한 대한민국, 행복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가치관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극복은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 실질적인 의미의 양성평등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심 되는 가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인구의 자질문제 제고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태어난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한사람 한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고 가르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행복한 인격체, 즉 일당백 일당천의 사람으로 만들어나가는 인구자질 향상 시스템(Human Development System)을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를 기리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을 흔히 쓰지만, 저출산 시대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수태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꿈의 시작(dream start)을 하여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 건강하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장애아, 저소득층 아이들도 무상교육 등 가난의 대물림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현재 전국 239개 시설에 약 2만여 아동의 버려진 아동이 있습니다. 한자녀 더 갖는다는 의미는 한아기가 더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는 것도 매우 적극적인 한자녀 더 갖는 운동이 될 것이고 입양은 하지 않더라도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나의 자녀로 돌보는 것도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해결하는 실천적 시작일 것입니다. 나의 아이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우리’ 아이들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육, 교육 및 경제 정책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획기적 대책 필요

(1) 경제적 부담 해소

출산을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교육비 등 교육비 경감, 무상교육확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는 교육정책의 변화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만 출산장려를 위한 개인과 회사에 대한 적극적 감세정책을 펼치는 방법도 또 한가지의 방법입니다. 자녀공제(예상가뭄, 1자녀 소득세 5% 공제, 2자녀, 15%, 3자녀, 20%, 4자녀 25%)는 물론 결혼하면 감세를 해주는 방법을 비롯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에게는 획기적 감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제도와의 연계, 자녀가 부담이 아닌 나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대단한 금동이의 개념으로 한자녀 더갓기 운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2) 출산양육 병행 위한 기반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범국가적 정책방향이 필요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큼니다. 가정과 사회 안팎에서 출산, 양육, 가사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분위기 하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보장을 위하여 산전후 휴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보장과 인사상 불이익금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 출산 및 육아휴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와 이행사항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함께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자녀라 생각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저출산문제에서 출산은 대단한 애국입니다.

예전부터 주창한 바 있습니다만 고용현장에서 ‘출산가산점’을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는 새 시대의 대단히 좋은 일과 직장 병용의 대안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야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의 질 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엄마 당사자보다도 더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는 육아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엄마보다도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육아시스템을 만든다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맡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 육아입니다. 바로 가정의 현장에서, 집 가까이에서, 직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랑의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땅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드림 스타트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가야합니다만 시작은 특히 가장 적게 혜택 받으며 태어난 아기들에게 국가가 가장 많은 혜택을 주려는 운동에서 시작합니다.

4. 통일 대한민국 미래 사회에 대한 고려

또 한가지의 커다란 변수는 북한의 상황, 통일 전후 우리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큰틀

에서 접근하여야겠다는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나간 학문적 열정과 경험을 이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문제를 법제화한 장본인으로서 국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다듬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애칭으로 ‘무지개법’이 되고 그 대책들이 무지개 계획(Rainbow Plan) 이 되기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무지개가 꿈과 희망을 상징하듯이 우리 국민의 미래가 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란 점도 있으나 무지개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다학제간,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계층을 위하고, 여러세대가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우리의 실질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과 참여가 해결의 열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열악한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 출중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현상을 돌리는 일에 핵심요소가 ‘생명의 가치’, ‘가족의 가치’에 대한 숙고와 가치 재정립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필자의 부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분여의 짧은 토론 시간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을 논의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 저 또한 지식공유의 일환으로 다른 토론회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발췌하여 23쪽에 걸친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많은 분들이 많이, 깊이 알수록 지혜를 모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어 여러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더 깊은 고민과 해결책 모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의 생각을 공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의 게재에 대하여는 주최 측과의 양해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 다 담지 못한 자료들과 다른 참고자료들은 네이버의 블로그 “안명옥의 무지개나라 <http://blog.naver.com/dramo23>” 또는 <http://www.amo21.net> 주소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토 론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 저출산 문제 인식

- 저출산의 경제·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도 높음(94.7%, '09.7 서울경제 여론조사)
 -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대응에는 부정적임(20대 92.8%, 30대 89.7%)
- 실제, 저출산의 국가·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정작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

□ 저출산 원인

- 현상적으로는 양육비용 부담(비용), 일·가정 양립 곤란(시간)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 이면에는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임
- 출산·양육을 책임졌던 가족·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아이의 부모가 부담하게 되고,
 - 출산·양육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고 그 부담을 대체할 사회적 수단이 미약하면서 출산율은 급락하게 됨
 - * (변화된 현상) 남녀차별 완화, 맞벌이 증가, 노인복지 증대, 핵가족화 진전, 학력 수준 증가, 지역 공동체 해체 → 안전문제 심각, 사교육 증가 등
 - 여기에다,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과 저출산 늦장대응이 겹치면서 출산율 하락 기울기는 더욱 가파르게 됨
- ☞ 現 출산양육 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발굴이 급선무

□ 저출산 대응

- 아이에 대한 인식이 **필수재** → **사치재**로 변화하여 자리를 잡았음
 - 이는 '가족'이 주어야 하는 삶의 즐거움, 안전망 등의 부가가치가 줄어들어드는 상황과 연관
 - 금전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윤택시켜 삶의 즐거움과 연결시키는 **발상의 전환** 필요
- 앞으로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고 해외에서 인구가 유입되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것임**

-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사회·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
- ‘09년 11월 미래위의 ‘저출산 대응전략’에서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저출산 극복방안을 제시**하였음
 -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의 양립기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 여기에 한국인 늘리기를 더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앞으로,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면서, 좀더 **차별화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
 - ☞ (발제문에서) 제2차 기본계획이 정책대상, 과제·주제, 주체에서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저출산대응에서 시사점이 큼
- 특히, **남성과 기업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정책수립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임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 및 가사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로 인한 부담은 기업이 나누어 갖는 것이 타당
 - 기업도, 지식기반 경제에서 여성인력 증가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야만 효율성과 이윤을 증가시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활성화 -> 인식과 문화의 형성

- 가사·육아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 확보와 함께 중요한 것은
 -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시간을 늘리는 것**
- ‘09년 한국의 성인 남성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2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증가 (통계청, 2009년 생활시간 조사)
 - 여전히 세계 최하 수준(스웨덴, 중국은 3시간 이상, 스페인 2시간)
- * 일하는 시간은 남자(4시간 52분)가 여자(2시간 48분)보다 2시간 4분 많은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여자(3시간 35분)가 남자(42분)보다 2시간 53분 많음

○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효과

- 아빠와 자주 대화하고 노는 아이는 **포용력, 논리력·사고력 증진, 사회성이 높아짐**
- * 아빠가 관심 갖고 아이와 대화할 때 창의성 커짐. 특히 남자아이는 자율성과 자기주도성 강화시킴(한국메사 정미숙 대표)
- 남편 집안일 도울수록 이혼율 낮고 가정 안정 커짐 (런던 정경대학(LSE) 연구, 3,300쌍 장기 추적결과)
- 최근 설문조사에서 가장 부러운 부부관계는 ‘가사·육아 분담(28%)’
- 2위는 ‘배우자가 돈 많이 벌어드리는 부부(21%)’, 다음은 ‘애정 표현에 적극적인 부부(20%, ‘배우자 자아실현 적극 지원(19%)’, ‘재산권 공동 소유한 부부(12%)’ 등이었음
- * Gmarket, 기혼자 2,854명 대상 설문조사

○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활성화

- 제도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을 늘려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고
- 가사·육아에 대한 남성의 인식변화, 새로운 가족·직장문화형성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
- 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조사·연구개발 지속 추진)

별첨: 본연구회 관련 기사 및 연혁

<별 첨 1>

조선일보[편집자에게]

이웃사랑 체감온도 똑 떨어진 2010 연말

(조선일보 37면 2010. 12. 7)

▲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은 거리에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교회·대형백화점·건물·거리 가로수에 오색찬란한 빛깔로 깜박이는 트리, 그리고 간간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세군 종소리 등일 것이다. 올해는 얼마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의 비리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해서인지, 예년 같은 연말 분위기를 아직 느낄 수가 없다.

사실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부금, 후원금을 포함한 성금들은 흔히 말하는 연말 대목 한철 동안 모금되어 그 다음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는 내년 살림살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해 연말을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게 보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해진다. 우리 국민들은 IMF사태 때를 비롯해 그동안 경제나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성금모금에 십시일반 동참하는 열기가 높아 사회적 체감 온도를 높여왔다.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되는 가정형편에서도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잘살고 못살고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비리·부패에 따른 불신이란 단어가 터지면서 우리들의 그런 작지만 훈훈한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거나, 심지어 그들의 비도덕성에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게 하고 있어 안타깝고 염려스럽다.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관련단체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게 될 성금과 후원에 종사자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들의 작은 성의에 힘을 얻어 삶의 의지 불태우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는 성금과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단체 기관이나 종사자들은 환골탈태하여 도덕성과 봉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부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자칫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올 연말 이웃사랑 나눔을 이어갔으면 한다.

<별 첨 2>

사설 ▼

조선일보[편집자에게]

새해에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조선일보 33면 2011.1. 4)

•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희망과 기대 속에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가 밝았다. 토끼는 평소에는 정직하고 유순하지만 위기에는 뛰어난 직관력과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거나 극복하는 동물임을 우리는 '수궁가'로 불리는 판소리에서 익히 보았다.

며칠 전 과천 정부청사를 지나면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문구를 봤다.

과거 성장기에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0~70%에 달했으나 지난 IMF 위기 이후 지속적인 불황과 설상가상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어 70%가 서민층이고, 15%가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중산층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 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귀속감도 중요하다. 소득 기준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상층으로 느끼고 있고 중·하층, 즉 서민층의 경우에는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서민들의 체감온도가 아직 차갑다는 것이다.

다행히 작년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맞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서민층 자영업자나 중·소 상인들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여전히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업무 계획'을 보면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도 5% 경제 성장 목표가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복지"라고 역설했다니 새해에는 서민들이 복지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새해를 장밋빛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이 장외투쟁으로 나섰다가 다행히 연말에 풀었지만 여전히 정치 불안정, 연평도 도발로 인한 북한과의 대치상황, 경제적 불공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정사회, 종교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불안 요소로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단결하고 희생정신을 발휘, 위기가 곧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곤 했다. 마치 토끼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살아난 것처럼. 신묘년 새해, 서민들이 골고루 따뜻한 온기를 많이 체감하고, 많은 국민들이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Chosun.com

<별 첨 3>

복지정책의 포퓰리즘에 대해

(id BUNDANG www.idweekly.com 2010. 10 25)

- 최근 정치권에서 진짜복지, 가짜복지라는 말이 거론되며 복지담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는 말 할 것도 없고 각 정당에서는 복지에 대한 재정충당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고는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 수혜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를,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제창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당의 차이로 인해, 때 아닌 진짜, 가짜 복지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시혜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느 당, 어느 정치인의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 장.단점에 대한 논쟁은 있어 왔으나 진짜, 가짜라는 선명한 흑.백 논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복지는 인간의 생애가 시작되는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정책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따라 또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하거나 선거용으로 선심성 마구잡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싶은데 첫째, 복지와 관련한 재원은 한번 증가하면 감소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담세율은 25%정도로 급변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복지 수요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한 담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거센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담세율을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해 국가적 고정비 지출에 해당하는 국방비 부담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예산의 운용 폭이 좁게 만들어 복지비 지출 부분만 폭발적으로 늘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에서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27.0%가 ‘복지’로 꼽았고 ‘공정’, ‘공평’, ‘정의’에 대해서는 11.7%로 답변해 화두는 단연 ‘복지’라고 기사가 실렸는데 이미 정당간, 잠룡으로 거론 되는 대선 후보 간에는 ‘복지’를 중요 어젠더로 삼고 담론을 선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지를 중요 공약을 내세우며 복지정책을 남발하기까지 했음을 익히 보았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 공약들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걱정되기조차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재, 국가 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과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즉,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었 수 있는 일이라면 국고가 바닥이 나든 채무국이 되든 상관없이 선심성 공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하위층,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규모 309조 6천억 중 복지예산을 작년대비 6.2%증가한 86조 3천억을 발표해 키워드는 단연 ‘복지’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복지국가로 실현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 29개국 두 번째로 높지만 GDP에 대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 급증, 생산구조의 변화, 소득 양극화의 고착, 대중의 기대수준 증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IMF 외환 위기 이후로 전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역사가 짧고 경제 수준도 높은 것이 아니라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복지지출을 확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돈 쓸 곳은 자꾸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는데 조세부담율을 현상 유지 하다는 것은 결국 사회간접자본(SOC)등 다른 분야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재정 건정성의 악화가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또한 복지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을 줄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비생산적이거나 소비적이고 일회성이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겠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기도 하며 사회통합을 이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지정책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휩쓸려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남유럽 국가를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시혜자이자 수혜자인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전문가, 비전문가,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자, 비종사자를 막론하고 정부,각 정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 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 옴부즈만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통해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 그 자체가 일반인의 각종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만 특정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사회복지의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의 한 쪽에 커다란 무게로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보수 이념을 초월해야하겠으며 또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좌,우파를 막론하고 복지정

책을 경쟁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데 최근 유럽도 중도·우파정당들이 정권을 잡은 지역이 늘어 났는데 유럽의 중도·우파정당들이 과거의 중도·좌파 정당의 정책들 ,특히 복지정책, 교육, 환경 정책들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이어서 계속 정책을 펼쳐나가는 나라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의 보수당 대표인 데이비드 캐머런 국무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파를 뛰어 넘어 政·民·官·學·産이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어 고민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며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이며, 그 책임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이 지게 됩니다.

<별 첨 4>

성남시 노·사·민·정 대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다녀와서...

(성남뉴스넷 2010.12. 20)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지난 14일~15일 1박2일 한화콘도 양평리조트에서 성남시 관내 노·사·민·정이 모여 대협력 활성화 위한 워크숍이 있었다.

바쁜 연말 중에서도 가장 모임이 많은 때가 바로 그 주간(週刊)이지만 성남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기꺼이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民의 입장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매년 봄이 되면 각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및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협상이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 단합해 임금인상을 요구 하려는 勞측과 조금이라도 덜 줄려는 社측과 교섭은 서로가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려고 하다보니 춘투(春鬪)로 이어지는데 내년에도 어김없이 있을 것이다.

매년 점철되는 일이지만 이때만 되면 노·사·민·정 모두가 민감해 진다.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파업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격한 투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을 언론에서 民의 입장에서 볼때면 정말 불안하고 안타깝다.

노·사 모두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마치 마주 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와 같다. 이 열차가 충돌하면 무고한 많은 인명피해는 말 할 것 없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이를 대화의 장,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능력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치력의 한계와 부재를 가진 官,政 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사 간 대립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이런 대협력의 자리가 마련 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왕 하는 것 몇 주라도 앞당겨 으면 조금 덜 바쁜 시기에 해서 참여율이 높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성남시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49,941개 업체에 이들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248,700명이 있다. 성남인구 1/4이 성남에서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이 24.2%(12,101개), 숙박 및 음식점 업이 18.5%(9,229개),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1.1%(5,564개) , 운수업 10.0%(5,016개), 제조업이 6.4%(3,192개)이다.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가 4명 이하 사업체가 39,557개로 7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노·사 간 마찰이 적은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날 대협력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두 분의 노사전문가 특강이 있었고 과제별 분임토의가 있었다.

워크숍이라면 의례 형식적으로 특강 몇 시간하고 분임토의 가진 다음 , 화합의 장의 시간에 더 관심과 비중을 두는 소위 먹고 놀자판으로 생각한다.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 나는 民의 자격으로 참석해 더욱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1박을 하지 않고 늦게라도 집으로 올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진지하게 분임토의를 하고 발표를 했다.

이어 ‘노사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다 같이 집중력과 협력을 요하는 도미노 게임을 하였다. 한 개 한 개 조심스럽게 퍼즐이 쓰러지지 않게 세우기 위해 모두가 집중하며 노력하는 그 순간은 같은組원들은 하나였다.

아니 그 게임에 참여한 다른組원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었다. 완성된 수천개의 세워놓은 퍼즐을 무너뜨리는 것은 딱 한 개의 퍼즐은 살짝 건드리는 순간 쉽게, 순식간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이 도미노처럼 협력하면 못 할게 없다는 것과 서로 신뢰를 쌓기는 많은 시간과 공을 정성껏 들여야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별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날 워크샵에서 참석해 흔히 말하는 뒤풀이 없이 싱겁게(?) 이렇게 일찍 잠을 청하기는 처음 일 것이다.

2일차 일정에서는 ‘선진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모색’에 대한 분임토의 하였는데 전 날 밤 미리 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 자리가 조금 비었지만 다시組별로 모여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부터 시작되었다.

또 그에 대한 대안제시 및 해결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발표를 하였다. 발표된 각 조별 문제점 내용과 대안은 대동소이한 의견이었다.

노·사·민·정 소통부족의 문제가 가장 크고 . 인사, 고용, 임금 시스템의 문제, 인격적 비하의 말과 행동, 존중 결여 , 법제도 악용, 노·사 본연의 의제를 벗어남으로서 정치권의 개입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다.

노·사 소통을 위해서 호프나 소주데이 ,동호회 활동이나 체육대회, 목욕탕 같이 가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직원 간 서로 인사하기, 미소 짓기, 직급호칭 대신 ~님 또는 ~씨 이름 불러주기, 서로 존칭어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날 참석한 분들은 거의가 각 기업체에 노조 활동을 맡고 있는 勞측이다 보니 건의 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이를 들어 주어야 할 社측 분들이 2명에 불과 했다.그러다 보니 맥이 빠지기도 했거니와 허공에 질러대는 소리와 같아 아쉬웠다.

이런 대화합을 위한 자리는 社측에서 적극적으로 자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매번 요구사항과 불평을 늘어놓은 자리를 굳이 만들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발전과 높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社 측에서는 勞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勞가 없는 社 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위에 있고 결정권을 가진 ‘갑’ 의 참여와 노력이 없다면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새해에는 社측의 참여가 많아 책상을 탕 탕 칠 지경의 격론을 서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마주 보고 밤새 가졌으면 한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성남시 노·사·민·정 대화합을 이루어 타 도시의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별 첨 5>

한방의료봉사 "노숙자들엔 희망과 건강을..."

(2011. 1. 29 분당FM방송)

분당F방송 곽효선 편집장

<국민희망포럼 한방의료봉사단:단장 진용우 한의사>,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공동 봉사활동 펼쳐..

2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노인 및 노숙자 70여명을 상대로 진료상담과 침, 부항, 환약과 한방 파스 치료가 이뤄졌다. 현장에 있는 한의사 등 15명이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고 자원봉사들이 보조 역할을 맡아 정연한 시스템 봉사가 이뤄졌다.

노숙자 보호시설 및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안나의 집(김하중 신부)'은 매일 500여명의 노숙자들이 무료급식 및 잠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350명 분의 약을 준비했는데 70여분밖에 치료를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저만치서 우리를 뒤돌아 보며 고마운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삶의 용기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가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희망포럼 한방봉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우 한의사는 "해외봉사에 참여한뒤 곧바로 안나의집 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도 있다. 봉사는 우리의 천직이다. 의료술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든 국민희망포럼 한방의료봉사단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이정숙 회장은 "노숙자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어디론가 잠자리를 찾아 가야하기에 치료를 받지 않고 서둘러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환자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므로 작은 병을 키우는 경우를 보고 의료봉사의 절실함을 깨달았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오랜 동안 방치해뒀 골마 터진 환부를 보고 많이 울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별 첨 6>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혁

2009

2009. 10. 15 발기인 이정숙외 2명, (가칭)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설립 논의
2009. 10. 21 제 1회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토론회 개최 구상
2009. 10. 25 (가칭)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 사무실 서울 서초동 계약
2009. 11. 07 사무실 입주
2009. 11. 09 발기취지문 작성
2009. 11. 10 정관 작성
2009. 11. 12 이사진 구성 (회장:이정숙)
2009. 11. 15 건국대 행정대학원 하미승 원장 방문, 토론회 주제 선정
(주제 : 미래 한국 복지 건설을 위한 신구상)
2009. 11. 15 토론회 장소 섭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2009. 11. 21 토론자 및 초청인사 선정
2009. 11. 23 주제발표자 선정 강옥모 교수(국립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9. 11. 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방문, 협조 요청
2009. 12. 04 홈페이지 도메인 확정 구매
2009. 12. 09 제 1차 토론회 발표논문 총 100부 제작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미래 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新구상'
주제 발표:강옥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1)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14.15대 국회의원)
2009. 12. 16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 이사모임
2009. 12. 18 1차 토론회 자체 평가회 (성공적 자평)
2009. 12. 20 박범진 前 총장
 (前한성디지털대학교,現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 고문으로 모심
2009. 12. 21 홈페이지 세부항목 구상

2009. 12. 22 1차 토론집 재판집 100부 추가 제작
 2009. 12. 22 제 2차 토론회 개최 논의, 주제 컨셉트(지방사회 복지) 선정

2010

2010. 01. 23 제 2차 토론 주제발표:백종만 교수(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2010. 01. 23 성남 서현동으로 사무실 이전
 2010. 01. 25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대강당 장소 확정
 2010.02.01~05 발표자 선정
 2010. 02. 23 2차 토론회책자 200부 발부
 2010. 02. 25 2차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발표: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 패널: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3) 이해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이규택 공동대표(미래희망연대),
 김 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2010. 03. 10 장석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우 성남사회복지연합회 회장 고문으로 모심
 2010. 06. 07 3차 토론회 준비, 주제자 및 날짜 확정
 정무성 원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위원)주제자로 선정
 2010. 06. 08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장소 확정
 2010. 06. 10 토론 주제 ‘한국적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선정
 2010. 06. 15~20 토론자 선정
 2010. 07. 01 박범진 전총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김창남 교수,
 이정숙 회장 3차 토론회와 관련 오찬 및 논의
 2010. 07. 01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고문으로 모심
 2010. 07. 04 이해련 교수 (경원대 아동복지학과) 이사로 모심
 2010. 07. 08 유병용 교수(한국정신문화원 기획처장) 이사로 모심

2010. 07. 09 서울특별시 후원 명기승인

2010. 07. 12 3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前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1.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MBC인터넷 뉴스 풀영상취재
 아름방송(성남),C&M(서울전역,경기동부)케이블TV취재,
 조선일보‘플라자’에 토론회 기사 게재

2010. 07. 14 정천석 소장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백석대 교수)이사로 모심

2010. 07. 16 최보희 선생님(광진구 보건소근무 /사회복지사 1급) 이사로 모심

2010. 07. 16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으로 올려짐

2010. 07. 19 정무성 교수님과 4차 토론회 논의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문제를 주제로 선정

2010. 07. 29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이사로 모심

2010. 08. 04 주제발표 최재성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주제 : 고령화 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2010. 08.05~ 16 토론자 선정

2010. 08. 16 박재운 세무사 이사로 모심

2010. 08. 19 조순태 회장 (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로 모심

2010. 08. 23 차홍봉 前보건복지부 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고문으로 모심

2010. 08. 26 고문, 이사회 저녁 7시 광화문 뉴국제H'두메라'

2010. 09. 03 백세균 회장 (사)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이사로 모심
 이현용 변호사 이사로 모심

2010. 10. 01 제 4차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 론 자 : 나임순 교수 (백석대)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곽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2010. 10. 22 박연준 사무총장으로 모심

2010. 11. 01 최석만 교수 (세종대학교) 이사로 모심

2010. 11. 23 고문 및 이사회 뉴국제H '두메라'

1)1주년 경과보고 2) 5차토론회 일시, 장소결정 3)사단법인 4)12월중 봉사

2011년 2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2010. 11. 29 레인보우 다문화예술단 창단공연 후원

2010. 12. 01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주제자로 선정

2010. 12 .02 나임순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사로 모심

2010. 12. 17~20 제5차 토론자 선정

2010. 12. 16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주최/『경기도다문화가족노래자랑』 경연대회 협력

2010. 12. 25 성남 '안나의집'노숙자 배식 자원봉사

2010. 12. 31 고문 및 이사 송년회

2011

2011. 1. 29 『국민희망포럼 한방의료봉사단』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공동으로

성남 ‘안나의집’ 노숙자 한방치료봉사

2011. 2. 17 제 5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 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후 원: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2011. 1. 6 뉴데일리 추천사이트 링크

2011. 1. 26 강태영 엔터앱 대표이사 홍보·기획이사로 모심

*‘한국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는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2010.7.16일)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풀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